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따른
공주시의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2021. 9.



제 출 문

공주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따른 공주시의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1. 9.

Since 1970 정부공인종합학술연구기관
 시민법원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대표이사 김 효 진



참 여 연 구 진

책 임 연 구 원	장	시	형
연 구 원	김	동	섭
연 구 원	박	현	진
연 구 원	김	민	주
연 구 원	박	은	정

■ ■ ■ 목 차 ■ ■ ■

I.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내용	4
3. 연구수행절차	6
4. 연구 기대 효과	7
II. 사업환경분석	9
1. 행정수도 완성	11
2. 공공기관 이전 분석	29
III. 지역환경분석	45
1. 정치	46
2. 경제	53
3. 사회	58
4. 기술	65
5. 법률	70
6. 환경	75
7. 시사점	82
IV. 공공기관분석	85
1. 공공기관 이전	87
2. 공공기관 선정	92
3. 공공기관 분석	98
V. 기본구상	119
1. 공주시 SWOT 분석	121
2. 기본 구상	123
3. 전략과제별 사업추진	125
VI. 연계발전방안	133
1. 지역상생 로드맵	135
2. 상생발전 거버넌스	137
3. 공주시의 역할	138
< 참고문헌 >	141

【 표 목차 】

<표 II-1>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위헌관련 내용	16
<표 II-2> 신행정수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경과	16
<표 II-3>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현황	17
<표 II-4> 세종시 관외 출장비 및 출장 횟수 현황	17
<표 II-5> 행정 비효율 문제점 및 애로사항	18
<표 II-6> 선진국 공공기관 이전 사례	32
<표 II-7> 선진국 공공기관 이전 발전 전략 사례	33
<표 II-8> 이전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38
<표 II-9>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정부 지원	39
<표 II-10>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방향 관련 연구	40
<표 II-11>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활성화 관련 연구	41
<표 III-1> 권역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략	49
<표 III-2> 충남지역 혁신도시 발전전략	51
<표 III-3>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예정)	51
<표 III-4> 2차 이전가능 공공기관	52
<표 III-5> 경제활동인구 총괄	53
<표 III-6> 성별 연령별 취업자 수	53
<표 III-7> 산업별 취업자 수	54
<표 III-8> 재정현황	57
<표 III-9>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여건	57
<표 III-10> 공주시 행정구역 현황	58
<표 III-11> 공주시 세대 및 인구	60
<표 III-12> 공주시 문화재 현황	77
<표 IV-1>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 체계	89
<표 IV-2> 유치대상 공공기관 분류	94
<표 IV-3> 유치대상 1차 분류 및 기관 정보	95
<표 IV-4> 대상기관 유치희망지역 및 필요면적	96
<표 IV-5> 공주시 유치가능 중점대상기관 선정	97
<표 IV-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일반 현황	99
<표 IV-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일반 현황	100
<표 IV-8> 한국행정연구원 일반 현황	101
<표 IV-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반 현황	102
<표 IV-10> 세종학당재단 일반 현황	103
<표 IV-11> 한국보육진흥원 일반 현황	104
<표 IV-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일반 현황	106
<표 IV-13> 동북아역사재단 일반 현황	107
<표 IV-14> 한국과학창의재단 일반 현황	108
<표 IV-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 현황	109
<표 IV-16>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일반 현황	110
<표 IV-17>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반 현황	111
<표 IV-1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일반 현황	113
<표 IV-1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일반 현황	114
<표 IV-2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반 현황	115
<표 IV-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일반 현황	116
<표 IV-2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반 현황	117

【 그림 목차 】

[그림 I-1] 연구수행절차	6
[그림 II-1] 세종특별자치시 외곽 산업단지	13
[그림 II-2] 신행정수도의 추진 배경	15
[그림 II-3] 행정수도 비전과 목표	19
[그림 II-4] 행정수도 완성 추진과제	20
[그림 II-5] 수도권 메가시티 계획도	23
[그림 II-6] 수평관계형 네트워크 관계 구축	24
[그림 II-7]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26
[그림 II-8] 세종 중심 방사환상형 행정수도권 구축	27
[그림 III-1] PESTLE분석을 활용한 지역환경분석 개요	45
[그림 III-2] 공공기관 PESTLE 분석 체계도	45
[그림 III-3] 공공기관 1차 이전 현황	46
[그림 III-4] 개별지자체 공공기관 이전 현황	47
[그림 III-5]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안)	48
[그림 III-6] 산업별 취업자	54
[그림 III-7] 직업별 취업자	55
[그림 III-8]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	56
[그림 III-9] 공주시 행정구역 및 구역별 위치도	58
[그림 III-10] 연도별 인구 추이	59
[그림 III-11] 연도별 인구 추이	60
[그림 III-12] 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대상지	62
[그림 III-13] 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	62
[그림 III-14] 동헌스마트창조도시 토지이용계획(안)	64
[그림 III-15] KTX 호남선 및 공주역 위치	66
[그림 III-16] 지방도 선형개량 위치도	66
[그림 III-17] 공주시 국도 지선 연장 위치도	67
[그림 III-18] 공주-세종 BRT 노선도(안)	67
[그림 III-19] 광역도로망 확충 계획	68
[그림 III-20] 광역도로망 확충 기대효과	69
[그림 III-21] 공주시 세계문화유산	78
[그림 III-22] 계룡시 도예촌	79
[그림 III-23] 충청유교문화권 공간체계도	80
[그림 III-24] 풍류관광권과 금강 누정선유길	81
[그림 III-25] 공주시 PESTLE 분석 시사점	82
[그림 IV-1]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기본방향	88
[그림 IV-2]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핵심요소	89
[그림 IV-3]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장애요인	91
[그림 IV-4] 공공기관 유치대상 선정 기준	93
[그림 IV-5] 공주시 유치가능 중점대상기관	97
[그림 V-1] 공주시 SWOT 분석	121
[그림 V-2]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기본구상	123
[그림 V-3] 행정요지 전략과제	125
[그림 V-4] 교육도시 전략과제	127
[그림 V-5] 문화거점 전략과제	129
[그림 V-6] 지역상생 전략과제	131
[그림 VI-1] 공주시 지역상생 로드맵	135
[그림 VI-2] 공주시 상생발전 거버넌스	137
[그림 VI-3] 공주시의 역할 제안	138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수행 절차
4. 연구 기대 효과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을 전국 권역으로 분산 이전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공주시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타당성 있고 구체적인 대응논리 및 전략을 마련하여 공주시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연구 목적

- 행정수도 완성추진이 공주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을 분석하여 공주시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제고함
-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으로 공주시의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2. 연구 범위 및 내용

가.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1년 본 연구 시점
- 과업기간 : 2021. 2. ~ 2021. 8.

□ 공간적 범위

- 공주시, 충청권 및 세종시

□ 내용적 범위

- 행정수도 완성 및 추진 방향 전망
 - 공주시 및 충청권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
 - 정부 주요 이전기관 대상 검토
 - 공주시 강점과 약점, 위기 및 기회 분석
 - 공주시 경제, 인구 분야 분석
 - 공주 관내 권역별 영향 분석
- 공공기관 이전 지역 확대
 - 행정수도권 개념을 활용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세종시에서 공주시로 확대하기 위한 논리 개발
 - 공주시에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관 선별과 논리 마련
-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공주시의 미래지향적 주요 사업 제안
 - 행정수도와 관련하여 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발전 방안 마련
 - 공주시 전체 및 권역별 발전 전략 및 정책 제안
 - 공주시와 행정수도권 상생 발전전략 마련

나. 연구의 수행방법

□ 사업 환경 분석

-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검토
- 관련 정책, 법규, 유사사례 등 분석
- PESTLE 분석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률, 환경 측면에서 사업 환경과 지역 환경을 분석

□ 유사 연구 분석

- 유사 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의 방향성 정립
- 각 권역 및 인근 지자체 분석을 통해 기관 유치 근거에 대한 객관성 확보

□ 기본 구상

- 사업 환경 분석과 지역 환경 분석으로 통해 공주시의 SWOT 분석 실시
- SWOT 분석을 통한 기본 구상
-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전 확대 전략 수립

□ 기관 연계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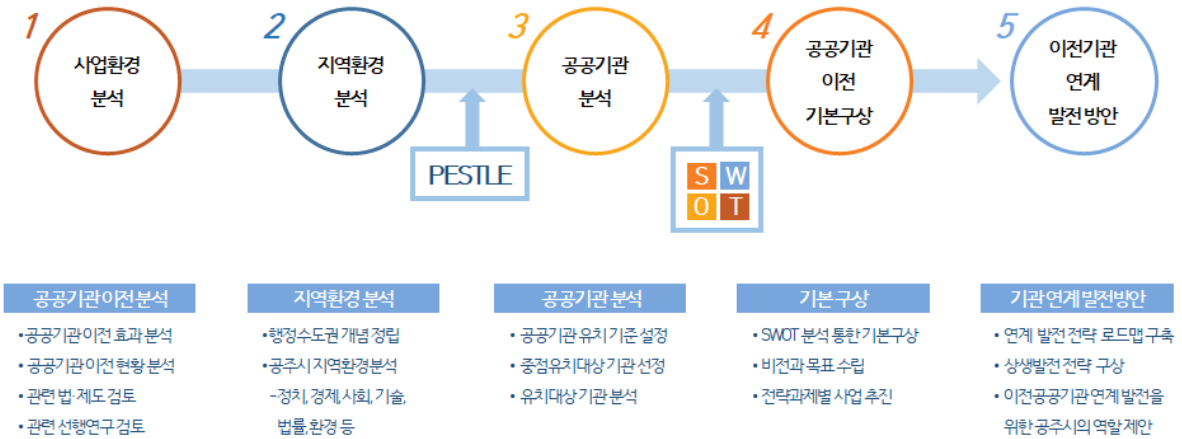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이전 공공기관 연계 발전 방안 로드맵 구축
- 행정수도관 상생 발전 전략 구상

□ 공주시 발전 방안

- 이전 공공기관 연계 발전을 위한 공주시의 역할 제안
- 지역 상생 발전 방안 제시

3. 연구수행절차

○ 본 연구는 사업환경분석을 시작으로 공주시 발전 방안에 이르는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 진행



[그림 I-1] 연구수행절차

4. 연구 기대 효과

- 본 연구 용역 수행을 통해 공주시로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고 공주시의 직접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산출함

□ 공주시 지역 발전 효과

- 행정수도 완성 및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따라 세종시 등으로 유출되었던 인구 유입 등의 효과
-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 관련 산업 발전, 고용 증가 등의 경제적 측면의 발전 효과
- 인구·경제적 측면의 상승효과와 함께 사회·문화적 측면의 발전

□ 지역사회 연계 효과

- 세종시 및 충남과 공주시의 인구, 경제, 사회문화 측면의 연계 효과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공동 발전의 기반을 마련

□ 행정수도 완성의 후속 지원 방안 근거 마련

-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따라 유관한 민간 기업의 후속 유치 가능성을 제고
- 지역인재 채용 등으로 인구 유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로 활용
-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후속 지원 방안 마련의 근거가 됨

□ 지역발전 정책 추진 근거

- 공주시 지역발전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추진 근거로 활용
- 공주시 및 지역사회 연계 정책 추진의 홍보 자료로 활용

II. 사업환경분석

1. 행정수도 완성
2. 공공기관 이전

II. 사업환경분석

1. 행정수도 완성

가. 행정수도

1) 일반사항

□ 수도권¹⁾의 개념

- 수도권이란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광역 대도시권을 의미함
- 한 나라의 수도는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로 정치·경제·행정·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필연적으로 인구와 시설 및 각종 기능들이 집중되고, 인구와 시설 과밀화로 점차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
- 교통이 발달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면적이 증가되어 외곽으로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 실제 수도의 영향권은 핵심 도시를 넘어 주변지역을 아우르게 되는데, 이렇듯 수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역을 수도권이라고 함
-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은 중심지인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아우름

□ 행정수도²⁾의 개념

- 한 나라의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도시별로 나뉘어 있는 이중수도(二重首都) 체제에서 행정부가 위치하는 도시
- 일반적으로 수도란 한 나라의 정치·경제·산업·교통·정보·문화의 중심지로 거의 모든 중추관리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나, 과밀 등에 따른 비경제성·비능률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 기능의 분화를 모색하기도 하는 바, 이 때 행정부가 위치하게 되는 도시를 행정수도로 칭함

1)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출처: 행정수도 [行政首都]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 행정중심복합도시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집중과 과밀화로 수도권의 문제가 발생함
-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교통 혼잡, 주택난 등 집적 불이익의 문제들, 환경 측면과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
- 수도를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는 여러 시설과 기능들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 계획 상 지방으로의 분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행정 측면에서의 분산 효과를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였음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동북부에 위치한 특별자치시로 2010년 12월 27일에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 연기군 전역, 공주시의 일부와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를 흡수하여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며, 교육·문화·첨단산업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임

2) 행정수도권

□ 행정수도권의 개념

- 일반적인 개념의 수도권과 같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그 영향이 미치는 권역을 행정수도권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행정수도권의 산업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외곽 지역의 산업단지는 조치원 산업단지, 전의 산업단지, 소정 산업단지, 노장 산업단지, 청송 산업단지, 부용 산업단지 등이 분포해있으며 방직, 유리, 광물, 전자, 기계, 화학제품 등 다양한 업종의 산업체가 입주해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곽 지역 산업은 농가 및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6% 가량인 전국 비율 대비 높은 편임



[그림 II-1] 세종특별자치시 외곽 산업단지

나. 행정수도 완성³⁾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한 필요로 인구, 산업활동, 일자리 등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음
 -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1970년 28.3%,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이며 2020년 기준 50%를 초과하였으며, 사업체과 인력 집중도 높아 왜곡된 국토구조가 계속되고 있음
 - 수도권으로의 전입사유는 직업과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도권 소재 대졸자의 94%, 비수도권 소재 대졸자의 32%가 수도권의 직장에 취업하고 있음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이를 행정수도로 하여 행정중심의 집약지로 개발함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극분산형 국토구조 형성

-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상생발전이 필요
 -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지속은 수도권의 비대화로 인한 지방의 자립적 성장동력 상실을 야기할 수 있음
- 다극분산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시업도시 등 분산형 지역성장거점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발전의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는 미흡한 실정임
 - 수도권 인구분산 측면의 한계,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 저조, 청년층 및 R&D 인력 등 혁신자원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발전 거점에 대한 기능강화 방안 마련필요
- 광역차원의 발전거점 육성 전략 검토필요
 - 수도권 집중 추세 심화에 대응하여 국토 공간 발전전략 모색 필요
 - 지방의 자원과 역량분산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를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3)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대토론회」, 20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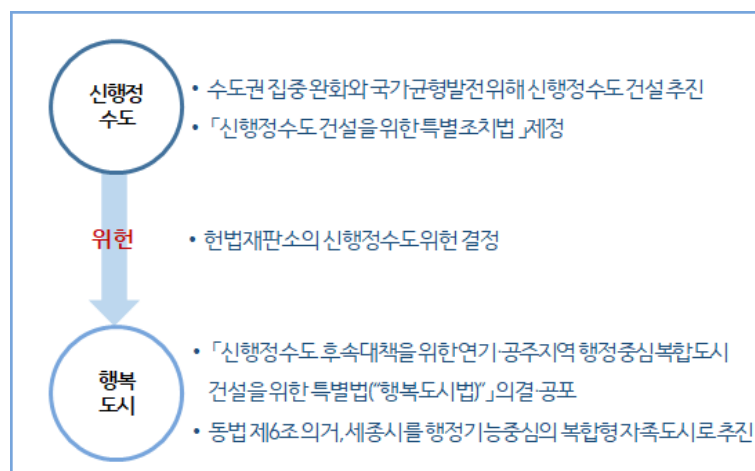
1) 신행정수도

□ 신(新)행정수도의 개념

- ‘신행정수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4. 4. 17. 시행)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함

□ 신행정수도 추진 경과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함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체계상 관습헌법 사항으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회 입법만으로는 수도 이전을 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됨(2004. 10.)
-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을 의결·공포(2005. 3.)함으로써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추진함



[그림 II-2] 신행정수도의 추진 배경

<표 II-1>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위헌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헌법상 수도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및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곳 → 헌법기관 중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됨
“수도=서울” 관습헌법으로의 인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제정 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한 헌법적 관습으로 헌법조항에서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함 →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년 이상 국가생활에 관한 규범적 사실로 일반적 성립요건을 충족함
“수도=서울”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개정이 필요함 · 국민의 종합적 의사 확인을 위해서 국민 투표 등의 방식으로 확인 필요 → 새로운 수도와 관련한 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관습헌법 폐지

출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대토론회」,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김동주, 국토연구원, 2020

<표 II-2> 신행정수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경과

구분	주요 내용
2003	01.07. · 대통령 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신행정수도 건설 포함
	12.29.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2004.4.17. 시행) ※194명 중 167명 찬성
2004	10.21. ·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2005	03.18.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정
	05.24.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고시
	11.24. · 헌법재판소, 행복도시법 위헌 헌법소송(2005.6.15.) 각하 (합헌결정)
2007	07.2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공식
2010	12.27.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2	07.01.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2.27. · 중앙행정기관 1단계 이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2019	8월~ · 중앙행정기관 5단계 이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출처: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 중앙행정기관 이전 현황

- 중앙행정기관 22개, 소속기관 21개, 총 43개 기관 16,470명의 인력이 2012년부터 2019년 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이전함

<표 II-3>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현황

구분	기관명
중앙행정기관 (2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복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인사혁신처, 소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21)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사무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본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2021년 6월 기준

2)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

□ 행정 비효율 해소

- 현재 중앙행정기관 43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으며 일부 중앙행정기관, 국회, 청와대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
 -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는 행복도시법에 의해 수도권에 잔류함
 - 국회, 청와대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현재 위헌판결로 이전이 불가한 상태임
-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관외 출장비 및 출장횟수의 증가 추세로 행정비효율이 발생함
 - 3년간 관외 출장횟수 약 87만 회, 출장비 917억 원으로 매년 출장횟수와 출장비가 증가추세에 있음

<표 II-4> 세종시 관외 출장비 및 출장 횟수 현황

(단위: 회, 백만 원)

구분	계	2016	2017	2018
관외 출장 횟수	896,255	252,363	284,503 (↑32,140)	332,389 (↑47,886)
관외 출장비	91,700	27,987	30,196 (↑22억 원)	33,517 (↑33억 원)

출처: 국감자료, 2019.

- 세종 중앙행정부처와 국회 및 청와대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에 따른 비효율(출장비, 시간 낭비 등)이 발생하여 국가정책의 품질저하가 발생함
- 4차 산업의 발달과 코로나 19 등으로 비대면 접촉방식이 활성화 되어, 온라인 화상회의나 데이터 공유방식 등으로 서울-세종간의 이원화 문제의 일부를 보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국감 참석, 대면 보고 및 협의 등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의 보완이 불가능 함

<표 II-5> 행정 비효율 문제점 및 애로사항

구분	문제점 / 애로사항
국회-정부간	자료 제출 및 공무원 출석, 국정감사 및 상임위등 참석, 당정협의회 참석
정부부처간	부처간 정보교환과 협의
대통령-부처간	국무회의, 비정기 회의참석, 장관 등 고위공무원의 서울상주에 따른 조직관리 약화 및 업무품질 저하
정부-민간간	민간전문가 및 위원 참석 회의 소집, 시민사회와 교류기회 감소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비효율 해소

-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경제, 교육, 문화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과 국가경쟁력 약화가 발생함
- 전국 228개 시·군·구 중심 42.5%인 97곳이 소멸 위험지역 등 지역 붕괴와 지방자치 안정성 훼손 우려가 심화됨⁴⁾
- 업무비효율의 누적과 세종시가 일부 행정기관 중심의 운영으로 미완의 행정도시로 남게 되면 성장의 한계가 있으며 이는 국토균형개발의 한계임

□ 다극국토체제 형성의 선도

- 행정수도의 이전은 수도권의 기능분산에 국한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발전을 실현하고, 지역특성화 발전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함
-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완성으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다극국토체제를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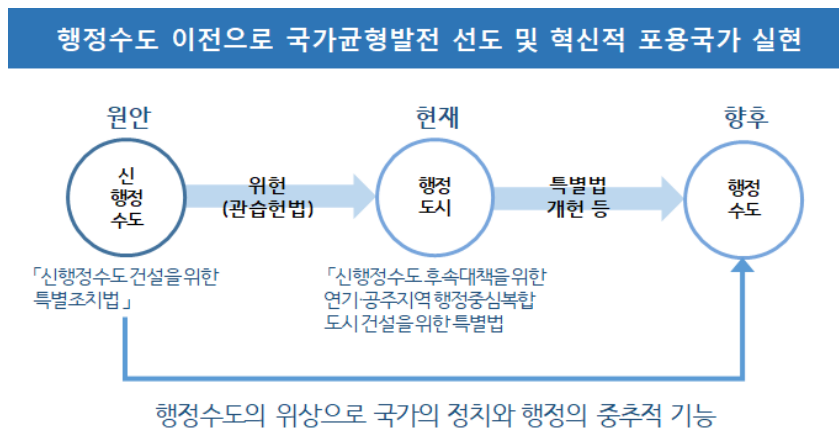
4) 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11월

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과제⁵⁾

1) 비전과 목표

□ 비전과 목표

- 비전: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선도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 목표: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통해 행정수도의 위상을 가지고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가지도록 함



[그림 II-3] 행정수도 비전과 목표

2)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제

□ 추진과제

- 국회, 청와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수도로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함으로써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함

□ 행정수도 이전 대상기관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국회, 청와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관련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음
 - 국회: 상임위,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 청와대: 청와대 전체 이전 또는 세종 집무실 등
 -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5)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대토론회」, 2020.8.



[그림 II-4] 행정수도 완성 추진과제

□ 이전 대상기관 필요 사항

- 관련 법률 또는 헌법 개정 등의 법적 조치
 - 행복도시특별법, 국회법 개정, 특별법 제정, 헌법 개정 등
- 이전 대상기관의 기능 및 기관 간의 업무연계 등
 - 국회(상임위, 예결위 등)와 중앙부처간의 업무연계 고려
- 이전 대상기관 이용 시설(국회 세종지사당 등) 건립 예산확보
- 국민 의견 수렴 및 실행가능 타당성 확보
 - 이전 대상과 방법, 수도권 대책 마련, 지방발전 계획 수립 등

가) 대상기관 이전

□ 국회 이전

- 국회가 수행하는 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현안보고 등의 기능에 대해 부서의 기능과 수요, 행정부처 업무 연계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청와대 이전

- 청와대 이전은 청와대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과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구분함
 - 세종집무실을 설치할 경우 세종에서 국무회의 및 부처업무보고 등을 진행함으로써 국정현안을 논의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이전

- 행복도시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의해 이전되지 않고 수도권에 잔류해 있는 5개 중앙행정부처를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수도로 집중하여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미이전 중앙행정부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 <2017. 10. 24.>
 6. 여성가족부

- 5개 부처 중 대통령외치(외교 및 통일안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처의 이동을 우선 검토함
- 대통령 외치에 해당하지 않는 부처: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

나) 법적 근거 마련

□ 법률 및 헌법 개정

- 법률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 이전 등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회법 개정함 (가칭 행정수도이전특별법 등 제정)
- 개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수도 및 행정수도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함
 -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함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 「세종특별자치기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함

다) 행정수도 기능 마련

□ 행정수도 도시 위상 및 기능 마련

- 국회(일부 또는 전체),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입법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될 경우,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구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함
- 행정·입법 기능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 미디어, 출판, 인쇄 등 각종 지원서비스와 생활서비스 수요 증가 등 직·간접적 파급효과 확대방안을 마련함
 - 국제 기능 증가 및 해외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수도의 도시인프라 확충

- 국제공항, 고속철도 등 국내외 주요지역과 접근성 강화
 - 인천 및 청주국제공항과 세종시 사이의 도시 인프라 마련으로 접근성을 강화
 - 전국의 주요 지역과 2시간 내외로 접근가능한 전국 간선 고속교통망 정비 및 확충
- 행정수도 기능 확대수용 및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 언론, 미디어, 컨벤션, 출판, 인쇄 등 지원 서비스 마련
 - 세계적 수준의 교육, 문화, 복지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그린시티 조성
 - 우수 인재 등이 선호하는 생활인프라 등 선진 정주환경 조성
 - 행정수도의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 혁신 클러스터 형성 및 대전·충남 등 인근지역 상생발전
 - 국가행정 및 국제기능 중심의 융복합 클러스터 형성 및 활성화
 - 첨단산업 및 대학, 교육, 언론, 미디어, 일자리 등 상생발전 방안 수립
 - 중앙부처와 출연기관 등의 국가행정 융합 클러스터, 행정도시 인근 대학, 기업과 함께 산학연 일자리 창출 선순환 클러스터 구축

라) 자치분권 강화

□ 자치행정권 강화

- 자치조직, 자치경찰, 특별행정기관, 행정법원(지방법원의 세종지원 등) 설치

□ 재정권 강화

- 예산 재정분야의 자치권 마련 및 특별행정기관 설치

라. 행정수도 완성 체계 구축⁶⁾⁷⁾

1)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 수도권 메가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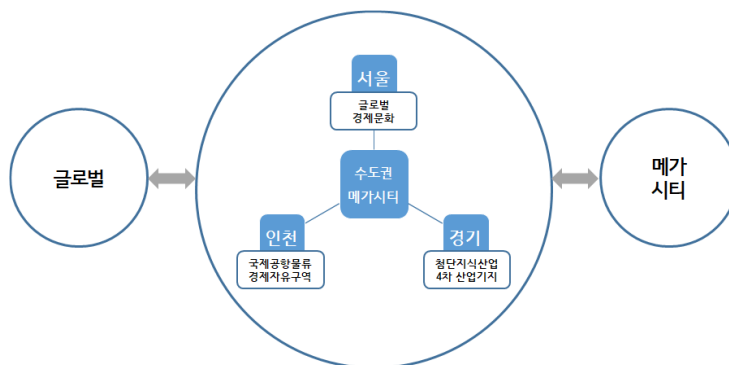
- 수도권은 행정적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문화적 역할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의 메가시티 경제권을 형성하고 자치분권 등에 의한 국도체계 개편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 서울의 4차 산업 기지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추진)

국가는 전구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 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문화수도로서 수도권 메가시티를 구축함
 -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 금융, 항공물류 허브, 미디어 중심,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도시, 첨단산업-지식기반서비스에 의한 지식산업의 메카로 도약, 문화 서비스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네트워킹 선도
- 수도권 메가시티는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과 경기도 각각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글로벌 환경 뿐 아니라 각 권역의 메가시티와 연결하는 연계점이 될 것임



[그림 II-5] 수도권 메가시티 계획도

- 서울: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미디어와 문화의 리더 역할
- 인천: 국제공항물류 기반의 항공·물류 허브 역할, 경제자유구역
- 경기: 4차산업 기지로서 첨단 지식산업과 ICT 기반의 스마트 산업 발전

6)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김동주, 국토연구원, 2020..

7) 「행정수도 이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 진종현, 공주대학교, 2020.

□ 다극협력체제 마련

- 행정수도의 이전과 함께 전국 메가시티 경제권 형성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함
 - 국토공간을 일극 중심체제에서 다극 협력체제로 전환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닌 다수의 초광역협력권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 다극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광역 시·도를 연계한 규모 및 집적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광역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융복합 경제를 실현함



[그림 II-6] 수평관계형 네트워크 관계 구축

□ 수도 충청권 역할 분담

- 수도권은 서울 중심의 글로벌 경제문화허브로 도약하고 충청권은 세종 중심의 행정수도권으로서 행적적 역할을 함
- 대전·충청 지역도 연계 발전을 필요로 하며 충청권 메가시티로 도약하여 중부권의 메가시티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2)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가) 충청권 메가시티

□ 행정수도 중심 충청권 메가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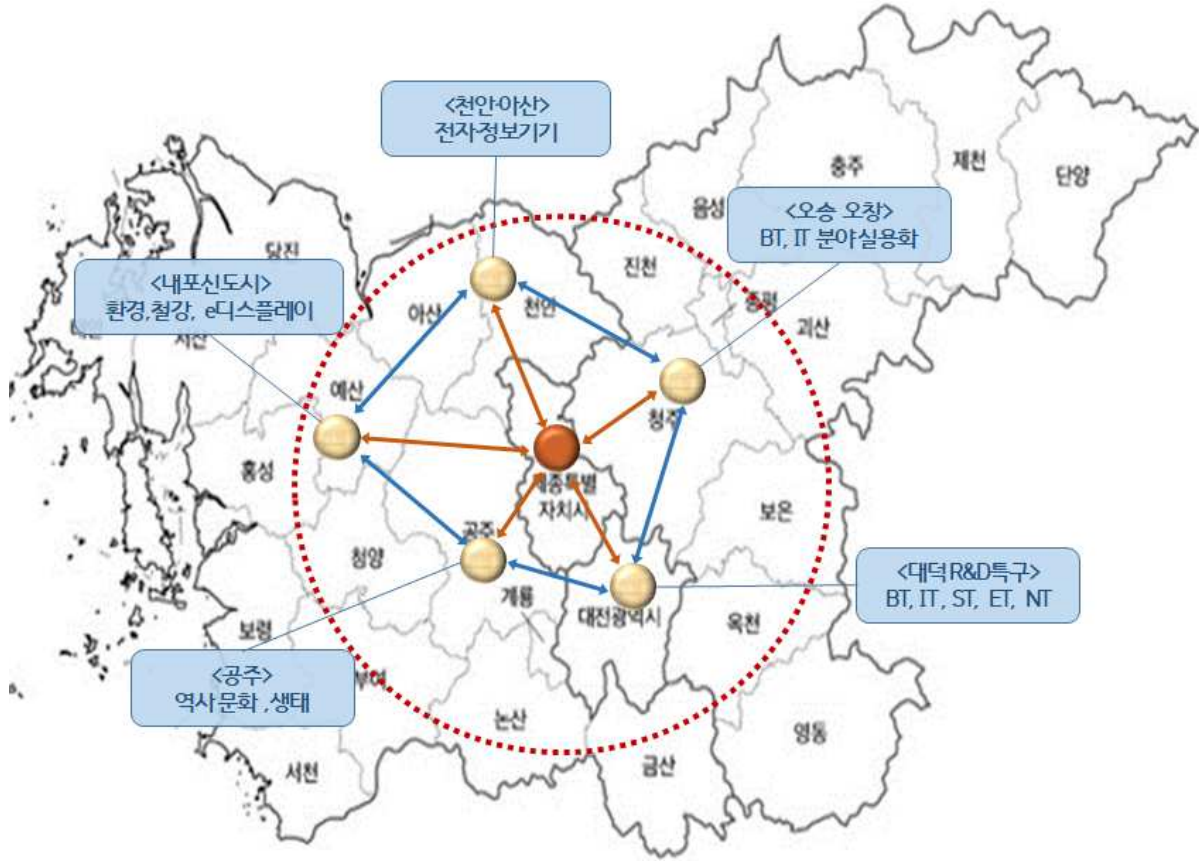
- 행정수도의 완성과 함께 행정수도인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함으로써 수평적 국가균형발전을 유인하고 충청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여 행정수도권의 메가시티화
- 행정수도권의 완성을 구체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함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수평적 다핵거점 균형발전을 꾀함

□ 충청권 협력체계 구축

-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권의 메가시티화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함
-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주요 시·군에 거점을 두고 거점 중심의 개발을 통해 충청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충청권 전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인함
- 충북, 충남, 대전의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특성 별로 주력 산업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함

□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SOC 보완

- 충청권의 메가시티화를 위하여 세종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접근성 향상을 꾀함
- 청주국제공항의 거점화, KTX 주요역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등을 구축하고 각 거점 시·도의 수평적 관계 유지를 위한 광역 연계 도로망 확충 등이 필요함



[그림 II-7]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 행정-과학기술-문화관광 연계 메가시티 구축

- 행정중심의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주, 천안·아산, 청주, 대전, 홍성 등의 거점 시·군의 연계를 통해 메가시티를 구축함
 - 공주: 역사·문화 중심, 생태 및 연구 중심 거점
 - 천안·아산: 전자·정보통신기기 중심 거점
 - 대전: 대덕 R&D 특구를 중심으로 BT, IT, ST, ET, NT 중심 거점
 - 청주: 오송, 오창을 중심으로 BT, IT분야 실용화 중심 거점
 - 홍성: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환경, 철강 e디스플레이 중심 거점

나) 행정수도권 공주시

□ 문화관광거점 공주시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으로 상생발전을 전략으로 공주시는 문화관광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공주시는 부여군과 더불어 백제 고도로서 다수의 문화재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
- 금강과 계룡산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 및 관광 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함
- 이러한 자원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행정수도권의 문화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상생발전 전략을 수립함

□ 방사환상형 행정수도권 구축

- 방사환상형 거점 구축이란 도시 내부를 연결하는 도로가 원형으로 순환하는 교통축으로 구성되고, 이 축을 기준으로 작은 규모의 생활권을 구축하여 교통축으로부터 연결하는 것임
- 세종시를 중심으로 세종-청주-대전-공주를 연결하는 방사 환상형 행정수도권을 구축하여 교통체증, 환경훼손, 비효율적 토지이용 등을 완화 함
- 현재 세종시 내부도 환상형 교통축으로 설계가 되어있으며, 수도권을 환상형으로 구축하는 이중 환상형 구성을 통해서 수도권 전체의 연계성을 제고함



[그림 II-8] 세종 중심 방사환상형 행정수도권 구축

다) 시사점

□ 수평적 행정수도권 구축

- KTX 세종역 개통 등으로 세종시 집중형 개발을 진행하면 서울중심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및 중앙 집중형 문제점을 되풀이 하는 결과
-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 행정기관·공공기관 집중 배치 시, 충청권 개발 불균형 초래
- 순환적 연계를 통해 인접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행정수도권 구축 필요
- ‘신수도권 벨트’형 개발로 거점 분산배치 및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발 필요

2. 공공기관 이전 분석

가. 공공기관 이전 배경

□ 행정수도의 출범

-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이 수립·고시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 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하고자 함
 - 2010년 인구규모를 5만 명으로 계획했으며, 2015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1단계에 15만 명, 2단계인 2022년에는 30만 명, 그리고 3단계인 2030년까지는 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광역대도시로 성장하는 계획을 수립함
- 2017년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법적 논의가 이루어짐
- 2017년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는 권력구조의 개편만이 아니라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 총강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이라 칭함)」 1조는 이 법의 목적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 세종특별자치시는 특수한 형태의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세종시법”이라 함)」 제6조(설치 등)에 따라 정부직할로 설치 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할구역 내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는 단층제 구조의 광역자치 단체임
-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과 재정의 자주권을 높이기 위한 도시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며, 국가의 책무로서 특별자치를 위한 시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음(세종시법 제3조)
- 국회와 청와대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하여,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되었던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움직임이 있음

□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제화

- 서울의 수도적 지위를 헌법 규정 속에 명시하고, 이를 전제로 한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것을 명백히 규정⁸⁾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외교부, 통일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 등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세종시의 행정수도 규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집중으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저해를 해소함
 - 군사적 측면에서도 국가안보적 취약성 보완
 - 통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분권 정책의 필요성
 - 통일 이후의 국가 안전성의 보장 측면

8) 신희권/임현만, 세종시, 개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행복도시착공 10주년·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7. 7. 6, 발표문, 31-57쪽; 윤수정,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 청와대 및 국회이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와 실현방안, 행복도시착공 10주년·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7. 7. 6, 발표문, 21-38쪽.

<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법적 지위(안 제5조)
 - 1)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도록 함.
 - 2)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안 제6조)
 -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 등 일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등 일원 및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으로 함.
 - 2)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충청남도 연기군은 폐지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범위(안 제7조 및 제10조)
 - 1)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 2)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 1)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기관 이전의 기능 및 효과

1)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적 기능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시도되어 왔음

<표 II-6> 선진국 공공기관 이전 사례

국가	공공기관 이전 사례 내용
영국	·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시초의 국가 · 런던이 세계의 중심이던 19세기부터 논의되기 시작 · 1960년대 이후 런던의 인구과밀과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1988년까지 총 4만 9백 명 이전
프랑스	· 1960년부터 지방 이전 기획 · 파리의 인구집중 억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이전 시작 · 199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약 2만 3천 명 이전, 이후에 270개 기관 3만 여명이 지방으로 이전
아일랜드	· 2003년 지방분산 프로그램 발표 · 더블린 집중 억제 및 지방 활력 증진을 위해 이전 · 25개 카운티 53개 지역, 1만 3백 명 이전
일본	· 1988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설정 · 도쿄 인구집중 해소 및 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하여 이전 · 40개 국가기관과 19개 공공기관 이전
스웨덴	· 1960년부터 지방이전 시작 · 스톡홀름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막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52개 기관, 1만1천 명을 지방으로 이전

출처: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지방정부학회, 배준구, 2005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기능을 크게 비용측면, 지역균형발전 측면, 교통 및 정보통신 발달 측면으로 접근함
- 비용측면에서 실업률이 높은 지방의 임금 및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방이 비용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주장으로 영국 지방이전 논리의 이론적 근거임
- 지역균형발전 측면은 수도권이 과밀화를 해소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낙후지역은 고급 기술과 인력을 공급받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함
 - 프랑스의 경우 전통 제조업이 쇠퇴한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함
 - 주요 내용은 낙후된 지역에 고급인력(기획·연구)을 유입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식·기술 수준을 강화하면서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과밀 억제를 달성함
-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달은 거리에 대한 제약조건을 완화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입지하더라도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논리임⁹⁾

9)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장안, 박양호, 김창현, 국토연구원, 2002

-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방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이전 논리임
- 프랑스의 경우 파리 고속철도 개통으로 지역분산 효과가 크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대면 접촉의 필요성이 저하된 것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당화 하는 요인임

2)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적 효과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기대효과는 일자리 이전효과, 지역별 산업구조 개선효과로 나눌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고급 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충원하기 위한 지방교육 여건의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지역산업구조가 개편되며 지역별 특성화 산업을 선별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궁극적인 기대효과는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와 지역경쟁력 제고, 지역 분산효과 등임
- 지식기반의 경제사회에서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 지역사회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산·학·관 연계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제고할 수 있음
 - 지역사회는 가용한 모든 학습 자원을 이용하여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의 형성하여 인적 자원 개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단위 주민들의 삶을 질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인적 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평생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이며 경쟁력임
-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산·학·관 연계를 통한 지방경쟁력 확보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중요한 내용임

<표 II-7> 선진국 공공기관 이전 발전 전략 사례

국가	사례	공공기관 이전 지역발전 사례 내용
프랑스	에브리시	·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 및 전문대학 설립 · 교통망을 활용한 파리 인적자원 활용
미국	실리콘밸리	· 스텐포드와 버클리 대학 인적자원 활용
독일	슈투트가르트	· 지역 특성화 부문 선정 후 대학과 연구소 기반으로 하이테크형 기술 개발

출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심구식, 한양대학교, 2009

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제도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에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는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공공기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그밖의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을 세부규정하고 있음
 - 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③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 기업체
 - ④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 ⑤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 ⑥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 이전대상 공공기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도록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는 다음의 각호를 제외한 기관을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명시함
 - ① 중앙행정기관
 - ②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 ③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 ④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 ⑤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 ⑥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⑦ 그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에는 지역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사항에는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 지역발전위원회는 장관급 당연직위원과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 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단 업무를 지원하고, 각 시·도지사의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지역발전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공공기관 이전 예산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에서 ① 생활기반계정, ② 경제발전계정,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함
-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온전히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나, 동법 제35조(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 제5호에서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으로 칭함)은 공공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함

□ 혁신도시법의 목표

- 「혁신도시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혁신도시법 상 공공기관 이전

- 「혁신도시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시, 이전의 규모 및 범위, 이전 시기, 이전 비용의 조달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요구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기관의 총괄적 이전을 기반으로 함
- 「혁신도시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에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전지원계획을 통보하도록 하여 중앙에서 이전지원계획을 통제하고 지원하고 있음
- 「혁신도시법」 상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원과 관련한 규정은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① 도로 및 철도 등 교통 시설
 - ② 수도 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③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④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⑤ 학교 등 교육시설

□ 혁신도시법의 공공기관 이전 지원

- 「혁신도시법」 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등)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주 직원의 이사비용, 이주수당 등의 지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주 직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주 후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혁신도시법」 상 필요한 사업의 재원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47조의 3(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서는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지원함
 - ① 혁신도시 내 기업 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
 - ②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증진
 - ③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 ④ 그 밖에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3)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원 제도

-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업무효율성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교육여건, 정주여건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표 II-8> 이전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구분	주요내용
기존 사옥 매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사옥 및 부지 장기 미매각시 토공 일괄매입 ·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손실 발생시 국고지원 · 토공에서 기존사옥 및 부지 매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새로운 사옥 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기관의 이전재원 부족액 국고지원 · 이전기관의 국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허용 · 이전기관의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허용 ·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 · 사옥 건축을 위한 농지조성비 감면 · 사옥 건축을 위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감면 · 사옥 건축을 위한 초지조성비 감면
이전에 따른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법인세 감면 · 지방이전과 관련한 경영자율성 확대 · 지방이전 관련 경영평가지표 개선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지원 강화

출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지원

〈표 II-9〉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정부 지원

구분	주요내용
주택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우선 분양 · 임대주택 우선 입주 · 주택자금 장기 저리 지원 · 주택 분양택지 우선 공급 · 독신 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 · 거주이전을 위한 주택 중복 조유 기간 연장 · 주택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교육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학교 적극 유치 · 다양한 학교운영 모형 시범적용 · 영재교육기간 우선 설치 지원 · 기존학교 교육여건 개선 우선 지원 · 다양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권장 · 이전기관 자녀의 전·입학 지원 · 학교설립 및 교원수급계획 조기 마련
정주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 기반시설 설치비(진입도로건설) 국고지원 · 기반시설 설치비(상하수도설치) 국고지원
경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전수당 한시적 지급 · 이사비용 지급 · 조기 희망퇴직·명예퇴직 허용 · 이직배우자 실업급여 지급 · 배우자 직장 알선을 위한 One-Stop 서비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공공부문 배우자 근무지 이전 지원

출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라.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전 대상의 변화와 분석 쟁점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다름
-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을 제고함

1) 정책 연구

<표 II-10>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방향 관련 연구

구분	연구자	주요내용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 연구	김광익 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정책 현황 · 행정·공공기관 관련 부동산 활용방향 검토 ·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권역별 인구이동 변화 전망 ·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간 통행연계 변화 전망 · 수도권 정책 전환의 방향 모색
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분야별 대응전략 연구	김태현 외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공공기관 추진현황 및 관련계획 분석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 예측 분석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분야 등)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수립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황 및 파급효과 연구	김태경 외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R 모형을 통한 고용변화 추정 · 공간계량경제모형을 통한 인구 및 GRDP 변화 추정

출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 연구(김광익 외, 2013)에서는 서울 및 인접 인구밀집지역의 글로벌 대도시권 육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글로벌 경제수도로서 경제적 제고를 위해 산업정비발전지역 지정을 논의함
 -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정비로 수도권정비계획의 위상을 강화하고 수도권정비권역의 조정을 위해 인구밀도 기준을 5,000명/k㎡을 하한선으로 제시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황 및 파급효과 연구(김태경 외, 2013)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적 적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함
 -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의 방안을 제시함
 - 건물 단위의 공공기관은 용도변경(종 상향)을 통해 순조로운 매각 추진과 추후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그 외 넓은 부지를 소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시·군 주도로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 수립하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대규모 이전 적지의 매각이 부진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후 지자체 또는 지역 필요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민간에 저렴하게 매각토록 하여 지역경제의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제언함

2)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표 II-11>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활성화 관련 연구

구분	연구자	주요내용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방안 연구	이종필 외 (2016)	· 이전공공기관 연계 발전방안 논의 · 지역연계사업 관련 정책 제언
충북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	김진덕 외 (2017)	· 충북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태 · 충북지역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

출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 충북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김진덕 외, 2017)에서는 충북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태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함
 -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채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 채용 시 석·박사 이상의 학력과 해당 분야의 역력을 요구
 - 이전 공공기관의 필요 이력과 지역 대학 학과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므로 지역인재 공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한 대학 과 공공기관 간의 미스매칭 정보 필요성 제언
 - 이전 공공기관과 도내 대학교 연합 대학원 과정 및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의 유연한 적용 제언
-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방안 연구(이종필 외, 2016)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연계 발전방안과 지역연계사업 관련 정책을 제언함
 - 부산시 산업육성 계획 등에 반영된 협력 사업(해양, 금융, 영화영상 관련)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협력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사업을 추진함
 - 정부차원의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부산혁신도시 총괄관리 기구 설립 등으로 지역연계 사업에 참여할 명분 제시
 - 부산혁신도시 종합지표 작성, 부산혁신도시 인지도 향상사업 추진 등을 통해 부산혁신도시의 통합관리와 인지도 향상 사업 추진을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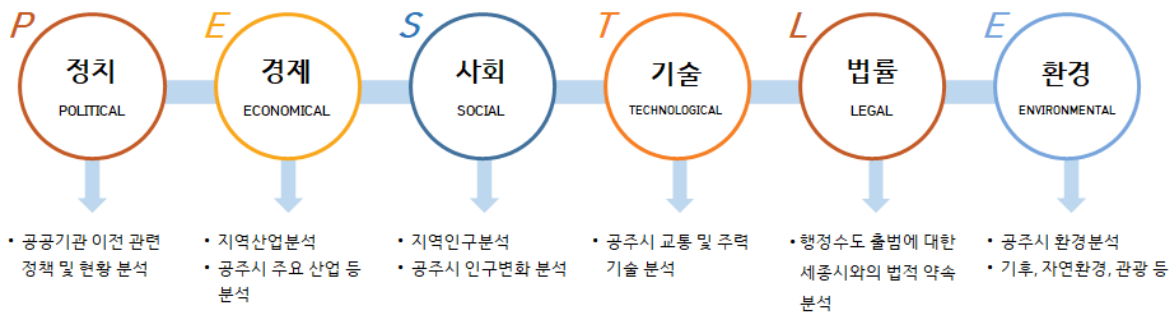
III. 지역환경분석

1. 정치
2. 경제
3. 사회
4. 기술
5. 법률
6. 환경
7.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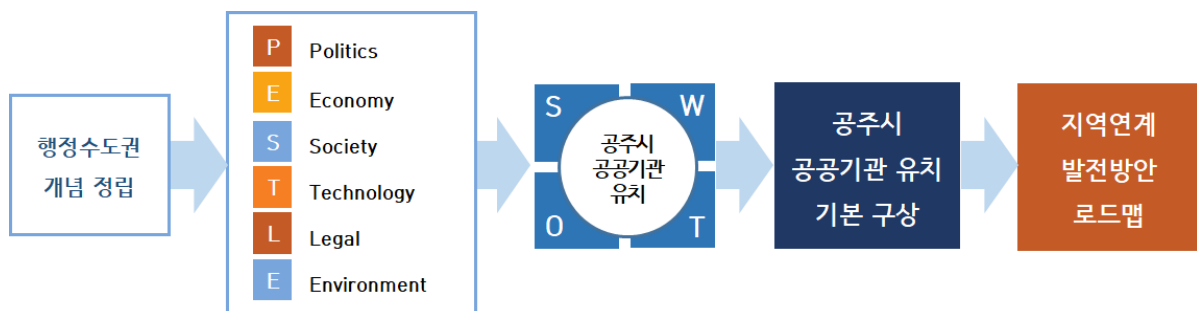
III. 지역환경분석

□ 지역환경분석 개요

- 행정수도의 완성 추진에 따른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환경분석은 PESTLE 분석에 기반하여 분석함
- 공주시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률, 환경적 현황 분석을 통해 공주시의 경쟁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주시가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의 기본 틀을 제시할 수 있음



[그림 III-1] PESTLE분석을 활용한 지역환경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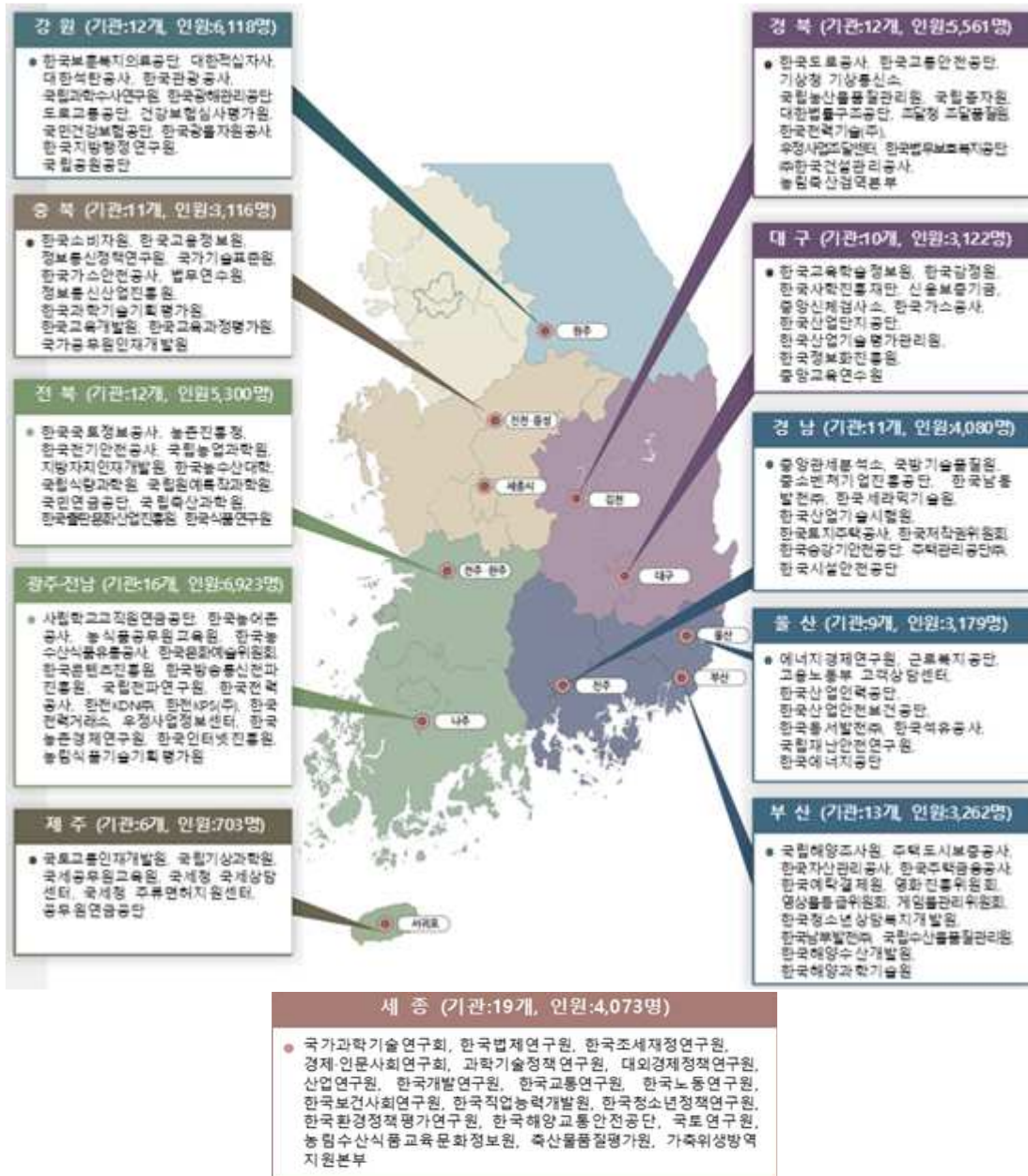


[그림 III-2] 공공기관 PESTLE 분석 체계도

1. 정치

가. 공공기관 이전 현황

1) 1차 공공기관 이전



[그림 III-3] 공공기관 1차 이전 현황

□ 1차 공공기관 이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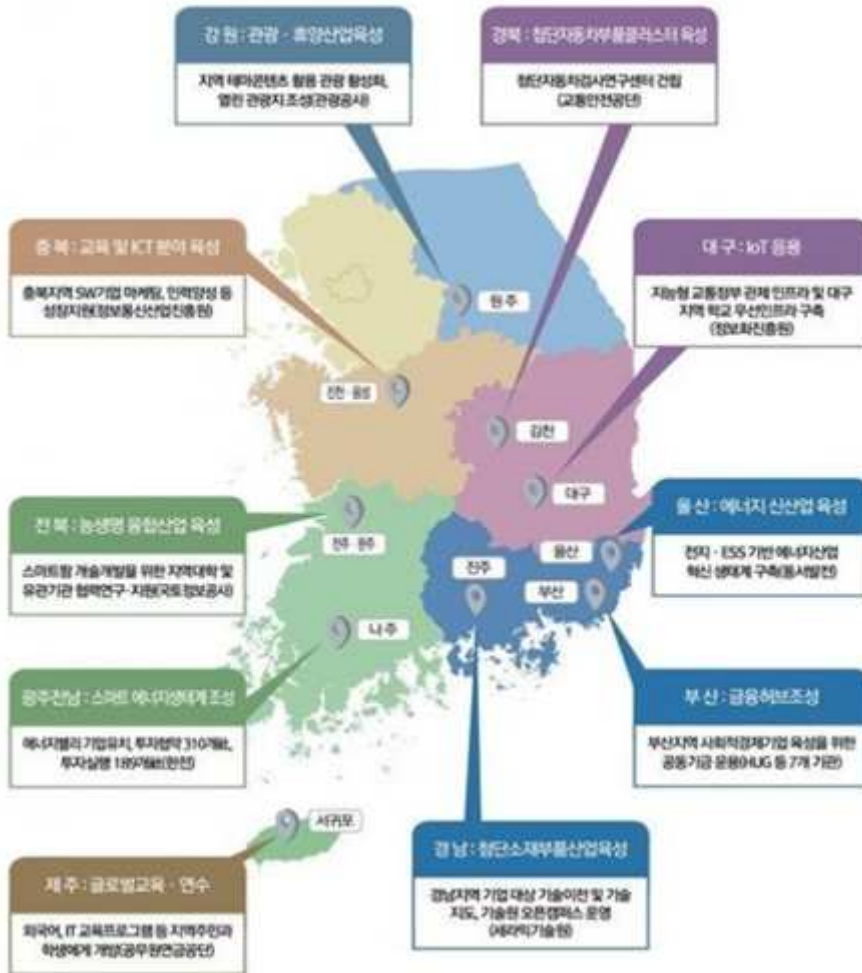
- 1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은 153개 기관으로 2019년 12월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임
- 1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10개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 짐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1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하였고
-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등 10개 혁신도시로 1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으며, 충남지역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아 충남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이 미미함
- 개별 지자체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22개 기관이 이전하였으며, 이 중 오송 5개 기관, 아산 4개 기관을 이전하여 개별 지자체로서 많은 기관을 유치하였음

개별이전 (기관 22개, 인원 6,236명)	
오송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 국립특수교육원, 경찰대학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논산	국방대학교
대구	중앙119구조본부, 한국장학재단
보령	한국중부발전(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원주	산림항공본부
익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주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태안	한국서부발전(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그림 III-4] 개별지자체 공공기관 이전 현황

2) 2차 공공기관 이전

□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그림 III-5]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안)

- 2020년 10월 기준, 10개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충남지역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근에 있어 초기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어 혁신도시가 설립되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혁신도시 설립법 가결로 혁신도시 건설기반을 마련하여 후발적으로 대전혁신도시와 충남혁신도시의 건설기반을 마련함

□ 충남지역 혁신도시 지정

- 2020년 10월 대전혁신도시와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충남지역의 공공기관 유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기반을 마련함
 - 충남혁신도시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충남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위치함
 - 대전혁신도시는 대전광역시 원도심 역세권과 연속지구를 예정부지로 지정함

□ 권역별 공공기관 추진 전략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각 권역별로 유치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타 권역에 비하여 낮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유치 대상 기관 선정과 추진 전략을 수립 중임

<표 III-1> 권역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략

권역	유치 대상기관	추진 전략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산하 기관 등 32개소 · 정부대전청사 입주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10곳)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문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18곳)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등과학원, 녹색기술센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 관련 기관(4곳) -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혁신도시에서 제외, 공공기관 유치 TF확대구성(충청권과 협력하여 유치) 스마트혁신도시 건설, 주택공급, 문화·여가·교통인프라 확충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진흥군, 환경에너지군, 의료군, 전략유치군으로 분류한 18개 기관 · IBK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위원회 구성/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 혁신도시 분야별 정주여건 개선 사업 추진,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난방공사, 공항공사, 데이터진흥원, 문화재단, 문화진흥주식회사, 문화관광연구원 등 에너지, 정보통신, 농생명, 환경생태, 과학기술, 복지노동, 문화예술 등 7개 분야 총35개 기관 1차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연구기획 TF 구성 /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안)을 제시 · 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도 및 운동본부 발족 · 유치활성화 지역토론회개최, 지역발전사업 지원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권역	유치 대상기관	추진 전략
부산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관련공공기관 9개	· 금융산업팀, 육성팀 등 전담팀 구성 ·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
강원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대한체육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개 기관	·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대형 우량 공공기관 유치 희망 ·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채용 및 육성,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등 상생협력강화 ·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와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 희망
경남	· 창원: 기계·금속 및 전기장비 등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	· 지역산업과 진주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 ·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및 상공계, 시민 등과 협력해 내년 대선 선거공약화 추진
경북	·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차 기관 연계 가능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 기존 유치 기관만으론 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해 주요 유치 대상의 산하·유관 기관까지 동반이전을 추진
전남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별정우체국연공관리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벤처투자,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어촌항공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 공공기관 선택 · 지역연계성이 높은 국책은행 유치 대상기관으로 지정 지역 금융시장발전에 무게 · 해양농수산업 및 환경 인프라 발전 관련 기관 집중
전북	·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10개 기관 유치목표	· 금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발판 마련 ·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특위 구성 · 청와대 방문, 전북연구원과 공동전략 수립
제주	· 해양수산과학기술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12개	·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사업 추진, 물류 단지 조성-제주항과 성산항 해운물류와 연계 · 제주 제2공항 추진 가능성 염두
충남	· 환경·기술, R&D, 문화·체육분야 집중공략기관 43개소 중 18개소 주력유치 · 환경: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한국상수도협회, · R&D: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문화체육: 한국체육산업개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관리거점 및 환경해권 주력산업 R&D 허브조성, · 산업연구개발 공공기관 모델 구축 등 · 수도권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동향 파악하고 충남도만의 입자장점과 지원내용 설명회
충북	·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충북 중부권 내 허브 공항 육성 희망 · 충북에 파급효과가 있는 공공기관을 더 배분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출처: 지역별 보도자료

□ 충남지역 혁신도시 발전전략

- 충남지역의 대전혁신도시와 충남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발전전략을 세워 추진하고자 함
- 대전혁신도시와 충남혁신도시 모두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이 발전전략 내에 포함되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함

<표 III-2> 충남지역 혁신도시 발전전략

구분	대전혁신도시	충남혁신도시
위치	동구 역세권 지구 / 대덕구 연축 지구	내포 신도시
발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기능의 집적화 · 주택공급, 문화·여가·교통 인프라 확충 · 스마트 혁신도시 건설 ·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원도심 발전 지원 · 4차 산업혁명과 연계 혁신성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 환황해권 주력산업 R&D 허브조성 · 산업연구개발 공공기관 모델 구축 ·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수도권에 잔류해 있는 152개 공공기관 중 122개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이전의 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음
 -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실행계획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 이유로 실질적인 추진은 중단된 상태임

<표 III-3>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예정)

(단위: 개, 명)

소재지	기관 수	이전 대상	근무 인원	주요 기관
서울특별시	117	99	48,066	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네트웍스,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등
인천광역시	7	3	4,246	한국환경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등
경기도	28	20	5,896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합계	152	122	5,8208	-

출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 2차 이전가능 공공기관

○ 2차 이전가능 공공기관의 122개 기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III-4> 2차 이전가능 공공기관

기관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재)한식재단	대한적십자사
한국나노기술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문화재단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방전직교육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OM 이민정책연구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재단법인한국여성 과학기술인지원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대한체육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고전번역원	세종학당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통일연구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코레일로지스(주)	예금보험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임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중소기업은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	코레일네트웍스(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코레일유통(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시청차미디어재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투자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향로표지기술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 국무총리실

2. 경제

가. 공주시 경제활동

1) 노동 및 취업

□ 공주시 경제활동 인구총괄

- 2018년 하반기 기준, 공주시의 경제활동 인구 총괄을 살펴보면, 공주시의 15세 이상 인구 9만 9천여 명 중 경제활동 인구가 6만 6천여 명, 비경제활동 인구가 3만 3천여 명임
-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는 6만 5천명, 실업자는 1천명이며 비 경제활동인구 중 가사육아 원인이 1만 3천, 재학 및 진학준비가 1만 명임
- 경제활동참가율은 66.7%, 고용률 65.6%, 실업률은 1.7%임

<표 III-5>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천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합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계	가사육아	재학·진학 준비	연로	기타			
2018 상반기	99.4	65.5	64.9	0.6	33.9	14.1	8.2	3.5	8.1	65.9	65.3	0.9
2018 하반기	99.4	66.3	65.1	1.1	33.1	13.3	10.0	2.8	7.0	66.7	65.6	1.7

출처: 제25회 2019 공주 통계연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주: 1)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수강 등 포함

2) 기타는 연소, 불구 등임

□ 성별 연령별 취업자

- 공주시 근무자 기준 성별,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18년 하반기 기준, 7만 4천여 명임
- 취업자 중 남성이 4만 2천여 명, 여성이 3만 2천여 명이며,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3만 8천여 명, 30~49세가 2만 5천여 명, 15~29세가 8만여 명임

<표 III-6> 성별 연령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취업자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2018 상반기	70.3	39.5	30.8	8.7	24.9	36.8
2018 하반기	74.5	42.0	32.5	9.6	27.1	37.8

출처: 제25회 2019 공주 통계연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산업별 취업자

- 공주시의 산업별 취업자수는 2018년 하반기 기준, 7만 4천여 명임
- 이 중 농림어업이 27.4%, 광업제조업이 13.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59.2%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7> 산업별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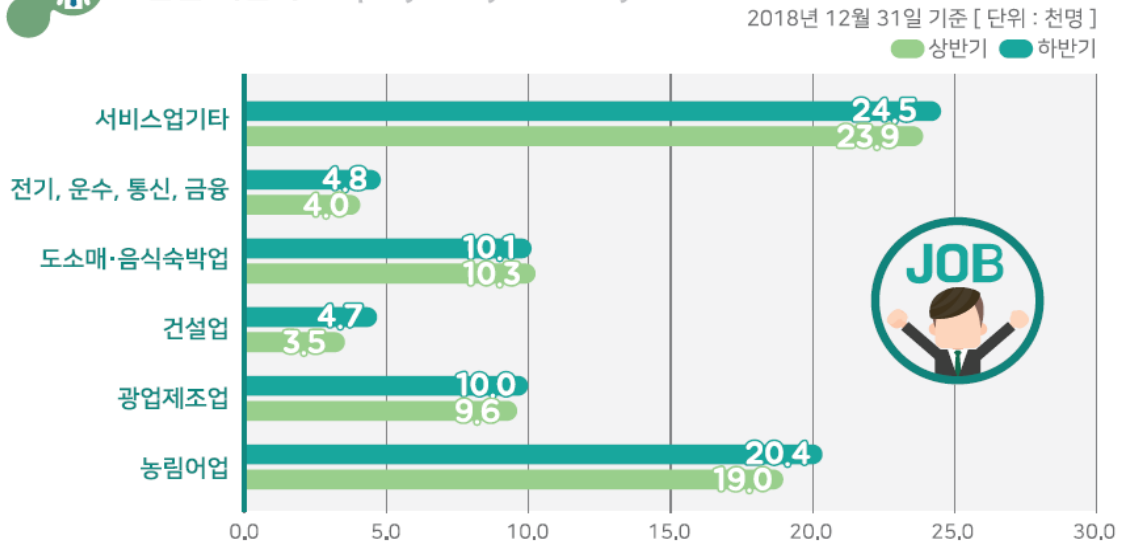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분	합계 (구성비%)	농림어업 (구성비%)	광업제조업 (구성비%)	계 (구성비%)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기타
2018 상반기	70.3 (100.0)	19.0 (25.5)	9.6 (13.7)	41.7 (59.3)	3.5	10.3	4.0	23.9
2018 하반기	74.5 (100.0)	20.4 (27.4)	10.0 (13.4)	44.1 (59.2)	4.7	10.1	4.8	24.5

출처: 제25회 2019 공주 통계연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별 취업자 Employed by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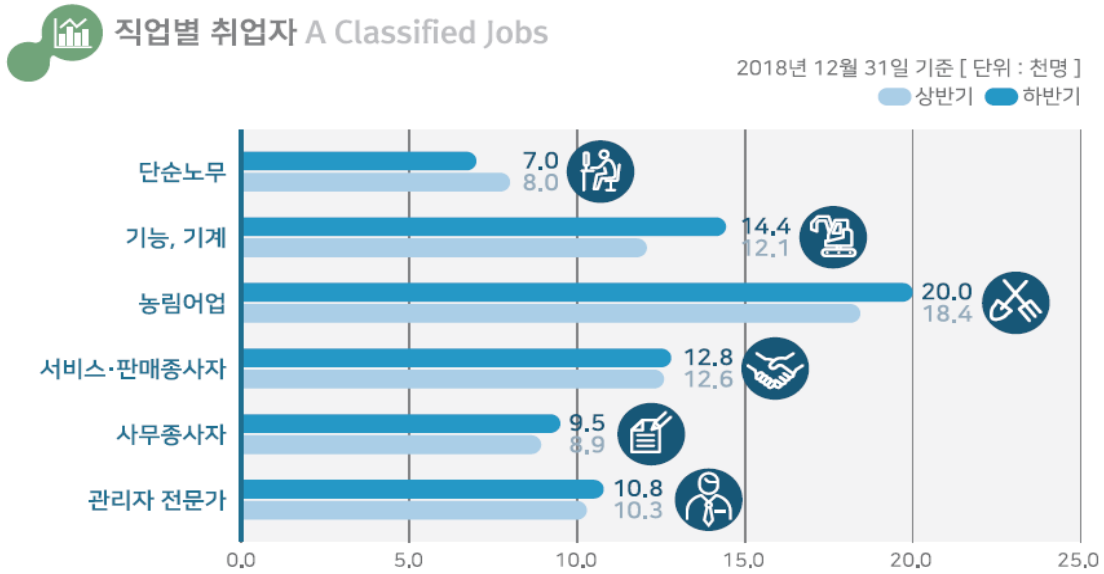


출처: 제25회 2019 공주 통계연보

[그림 III-6] 산업별 취업자

□ 직업별 취업자

- 공주시 2018년 하반기 기준, 농림어업 종사자가 2만 명으로 가장 많고, 기능·기계관련업 1만 4천여 명, 서비스·판매종사자 1만 3천여 명, 관리자 전문가 1만여 명, 사무종사자 9천여 명, 단순노무 7천여 명임



출처: 제25회 2019 공주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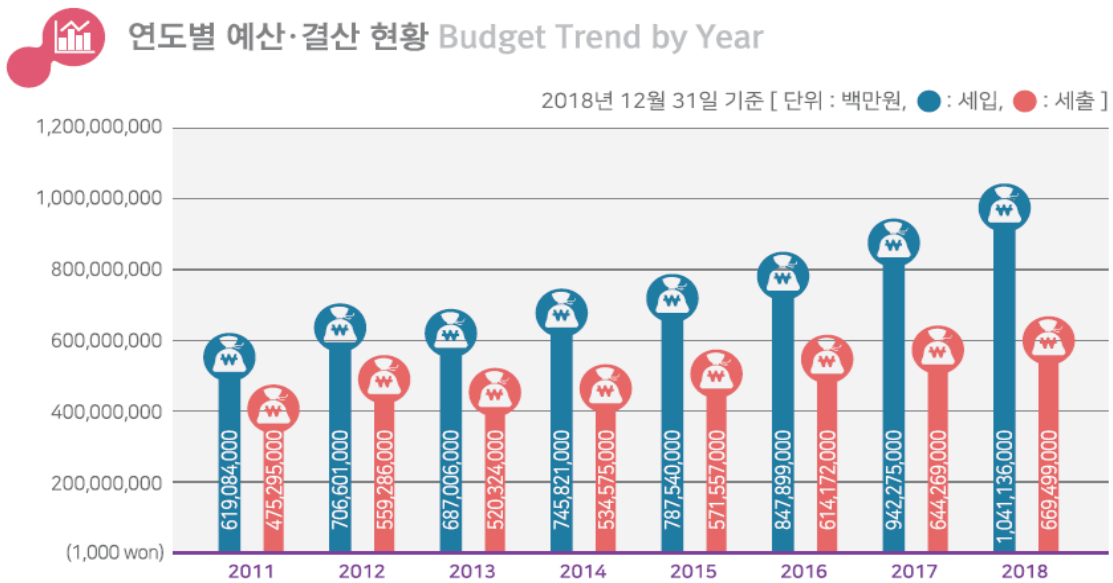
[그림 III-7] 직업별 취업자

나. 공주시 재정현황

1) 예산 규모

□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

- 2018년 12월 기준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세입이 1,104,136백만 원, 세출이 669,499백만 원이며, 잉여 371,637백만 원임
- 일반회계 기준, 세입이 918,938백 만원, 세출이 617,839백만 원임



출처: 제25회 2019 공주 통계연보

[그림 III-8]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

□ 예산 및 재정 현황

- 2021년 예산규모는 세입이 8,459억 원, 세출이 8,459억 원으로 2020년 8,905억 원에 비하여 446억 원 감소하였음
 -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7,839억 원보다 예산규모가 620억 원 가량 큼
- 재정자립도는 2021년 12.74%로 2020년 12.53%보다 0.21%p 증가하였음
 - 2020년 유형 지방자치 단체 평균 12.32%보다 높은 12.53%였으나, 2021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유형지방자치단체 평균 12.79%보다 낮음
- 재정자주도는 2021년 61.46%로 2020년에 비해 1.45%p 감소하였으나 유형지방자치단체 평균 58.5%보다 높음

<표 III-8> 재정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공주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¹⁰⁾ 평균			
	'21년 (A)	'20년 (B)	증감 (C=A-B)	'21년 (A)	'20년 (B)	증감 (C=A-B)	
예산 규모	세입예산	8,459	8,905	△446	7,839	7,665	174
	세출예산	8,459	8,905	△446	7,839	7,665	174
재정 여건	재정자립도	12.74	12.53	0.21	12.79	12.32	0.47
	재정자주도	61.46	62.91	△1.45	58.5	61.32	△2.82
	통합재정수지	-360	-393	33	6	17	△11

자료: 2021년 공주시 재정공시(당초 예산기준). 2021.2.

주: △는 감소를 의미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함
 - 2021년~ 2025년까지 세입과 세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0.10%로 5년간 5조 4,634억 원 계획

<표 III-9>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여건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입	1,090,882	1,091,553	1,091,590	1,093,420	1,095,962	5,463,407	0.10
자체수입	114,614	117,840	119,120	120,917	122,357	594,848	1.60
이전수입	712,391	721,565	718,726	718,999	722,691	3,594,371	0.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3,877	252,148	253,744	253,504	250,915	1,274,188	-1.30
세출	1,090,882	1,091,553	1,091,590	1,093,420	1,095,962	5,463,407	0.10
경상지출	274,573	295,844	294,232	304,496	302,076	1,471,221	2.40
사업수요	816,309	795,709	797,357	788,924	793,886	3,992,186	-0.70

자료: 2021년 공주시 재정공시(당초 예산기준). 2021.2.

주1: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주2: 연평균 증가율=(최종연도/기준연도)^{1/(전체연도 수-1)}-1x100

10) 유형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는 시-(IV) 유형 소속으로 아래 19개와 동종단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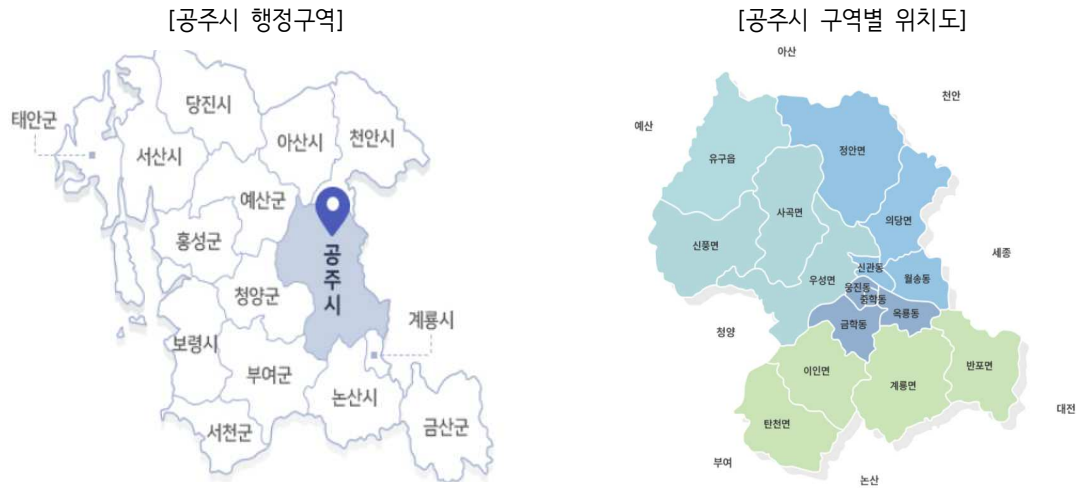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제천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3. 사회

가. 행정구역

□ 공주시 행정구역

- 공주시는 충청남도 동부 중앙에 위치하며 동쪽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서쪽은 예산군과 청양군, 북쪽은 아산시와 천안시, 남쪽은 부여군과 논산시, 계룡시와 접해 있음
- 공주시의 총 면적은 864.19km²로 충청남도 총면적(8213.36km²)의 10.5%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출처: 제25회 2019 공주 통계연보

[그림 III-9] 공주시 행정구역 및 구역별 위치도

- 공주시는 1개 읍, 9개 면, 6개 동으로 구분되며 248리, 137통, 1,977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I-10> 공주시 행정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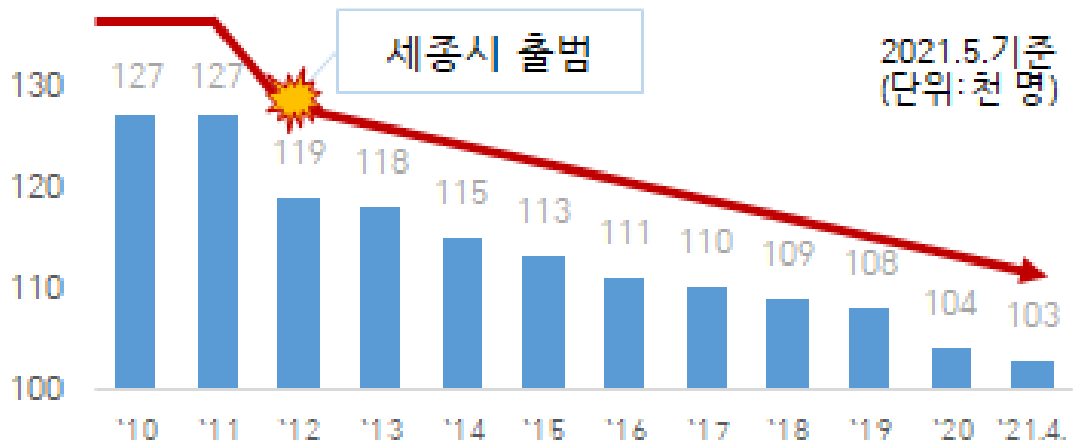
구분	읍	면	동	리	통	반	면적
내용	1	9	6	248	137	1,977	864.19km ²

출처: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주통계, 2021년 4월 30일 기준

나. 인구

□ 연도별 인구 추이

- 공주시의 인구는 2007년 12만 8천여 명이었으나, 2012년 11만 9천여 명으로 급감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4월 기준 10만 3천여 명으로 감소함
-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공주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추세임
 - 2012년 공주시 조례 제 821호(2012.6.19.)로 반포면, 5개리, 의당면 5개리, 장기면 11개리의 인구 5,846명, 면적 76.1km²을 세종시로 편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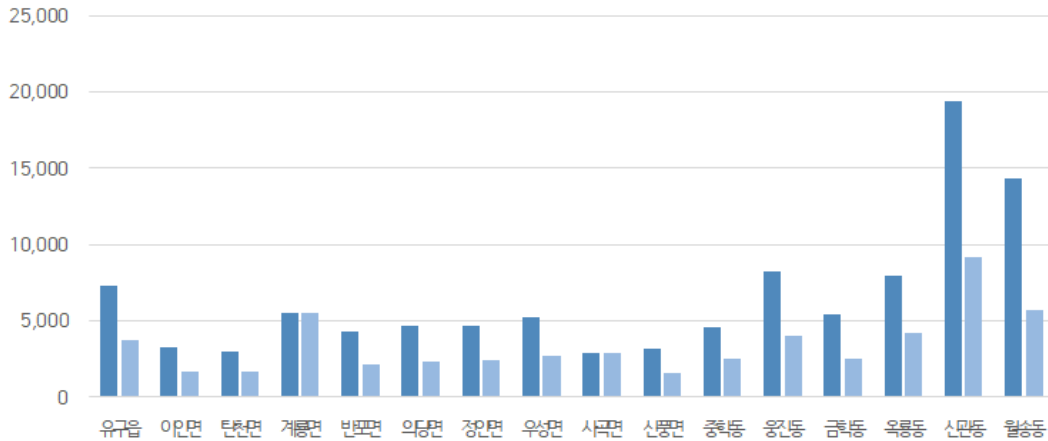


출처: 공주시청 홈페이지

[그림 III-10] 연도별 인구 추이

□ 공주시 세대 및 인구

- 2021년 5월 말 기준 공주시의 인구는 54,861세대, 103,753명으로 남성이 51,927명, 여성이 51,826명으로 성비는 50:50임
- 행정구역별로는 신관동이 9,195세대, 19,372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 뒤로 월송동이 5,735세대, 14,335명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임
- 신관동과 월송동에 공주시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임



출처: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주통계, 2021년 5월 30일 기준

[그림 III-11] 연도별 인구 추이

<표 III-11> 공주시 세대 및 인구

(단위: 세대, 명)

구분	세대	계	인구	
			남성	여성
공주시	54,861	103,753	51,927	51,826
유구읍	3,781	7,325	3,701	3,624
이인면	1,666	3,227	1,660	1,567
탄천면	1,639	2,975	1,535	1,440
계룡면	5,483	5,483	2,809	2,674
반포면	2,157	4,257	2,237	2,020
의당면	2,358	4,648	2,396	2,252
정안면	2,469	4,628	2,410	2,218
우성면	2,723	5,220	2,716	2,504
사곡면	2,891	2,891	1,452	1,439
신풍면	1,547	3,200	1,438	1,762
중학동	2,507	4,587	2,298	2,289
웅진동	3,996	8,238	4,043	4,195
금학동	2,509	5,414	2,705	2,709
옥룡동	4,205	7,953	4,002	3,951
신관동	9,195	19,372	9,437	9,935
월송동	5,735	14,335	7,088	7,247

출처: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주통계, 2021년 5월 30일 기준

다. 도시개발사업

- 공주시는 행정수도권으로서 공공기관 유치 기반 마련 및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1) 충남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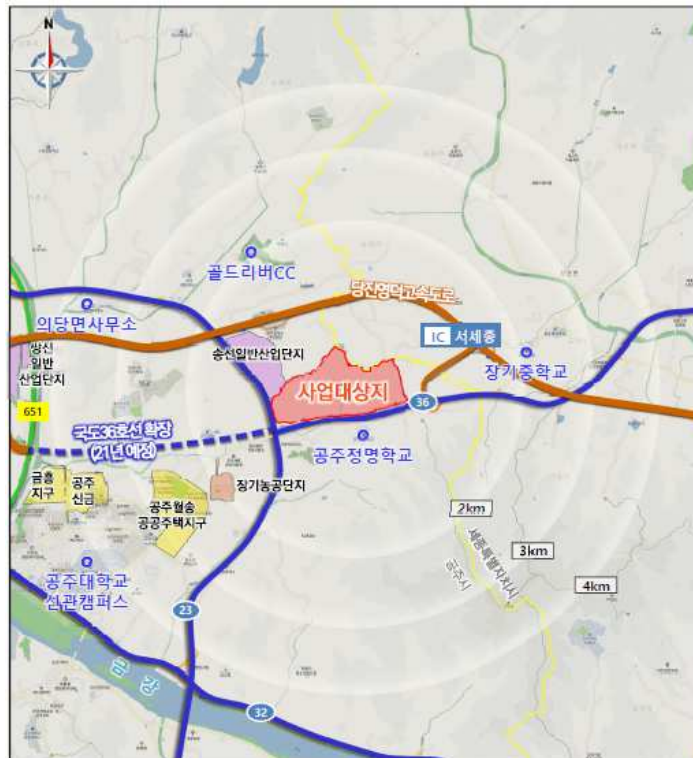
- 지방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및 충청권 광역경제권에 부합하고, 세종시 연접지역에 대한 개발 발전축 형성으로 공주시의 동반성장을 기대함
-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상 강북생활권으로 세종시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여 집값 및 서민주거 안정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충남으로의 인구 유입 및 발전 기틀을 마련함
- 도심중추관리, 첨단산업거점유통, 복합업무 및 교육기능

□ 사업개요

- 사업명: 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 기간: 2021년 ~ 2027년
-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 면적: 약 939,594㎡(29만 평)
- 접근성
 - 세종청사까지 10km, 20분 소요 예정
 - 광역 BRT 설치 예정(세종~공주터미널)
 - 남측 국도 36호선(6차로 확장중, 서측 국도 23호선 (4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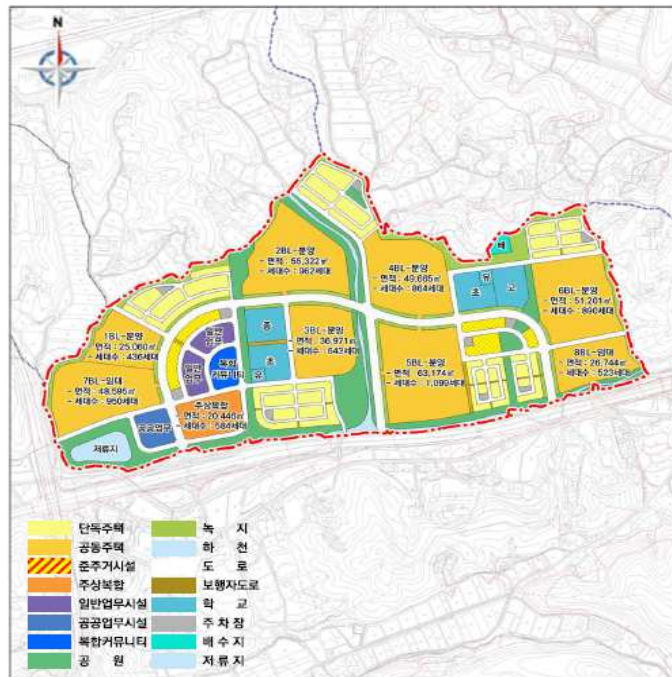
□ 개발계획

- 개발비중: 주거(52%), 업무(2.6%), 도시기반시설(45.4%)
- 계획인구: 7,241호, 16,799인
-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2개소(14,557㎡), 공공업무시설 1개소(10,196㎡)
- 교육시설: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출처: 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충청남도개발공사, 2021.

[그림 III-12] 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출처: 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충청남도개발공사, 2021.

[그림 III-13] 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

2) 동현스마트창조도시 개발사업

□ 개발방향

-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행정수도권 시대 새로운 성장벨트 구축
- 세종·대전시와 연계하여 세종시의 신성장 거점으로서 새로운 발전축으로 개발하며 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과의 승수효과 기대
-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상 강북생활권으로 행정지원
- 시설 및 신시각지 개발, 세종시 개발 압력 완충 지역

□ 사업개요

- 사업명: 동현스마트창조도시 개발사업
- 기간: 2021년 ~ 2027년
-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동 산 1-1 일원
- 면적: 약 28만^m²(약 8만 5천 평)
 - 공공개발 약 13만^m², 민간개발 14만^m²
- 접근성
 - 서세종 IC에서 0.5km
 - 세종청사까지 10km, 20분 소요 예정
 - 광역 BRT 설치 예정(세종~공주터미널)
 - 남측 국도 36호선(6차로 확장중, 서측 국도 23호선 (4차로)

□ 개발계획

- 개발비중: 공공업무시설 13만^m²(48%), 민간택지시설 14만^m²(52%)
- 사업비: 약 440억 원

□ 장단점

- 세종시 외곽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로 인구 유입
- 정부 세종청사와 인접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유리함

- 시유지가 약 49%를 차지하여 개발비용 절감 가능
- 단지 내 표고차로 인하여 가용지 추가확보 곤란
- 기존주택이 다수 입지하여 보상에 따른 민원 예상



출처: 정부의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추진계획, 공주시, 2021.

[그림 III-14] 동현스마트창조도시 토지이용계획(안)

4. 기술

가. 교통

□ 공주시의 교통

- 공주시를 중심으로 국도 23번, 32번, 36번, 39번, 40번 등 5개 노선이 설치되어 있음
 - 남북으로는 아산, 천안, 논산, 부여와 연결되어 있고, 동서로는 대전, 조치원, 청양 등과 연결되어 있어 충청남도의 교통의 요충지임
- 공주시는 호남철도계획과 대전-당진, 천안-논산, 공주-서천 간의 고속도로 계획으로 향후 충청남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1) KTX 공주역

□ KTX 공주역 현황

- 2015년 4월 KTX 호남선 개통과 함께 KTX 공주역이 개통되어 수도권 및 호남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높아짐
 - 위치: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67-2번지 일원(건축 3층/연면적 5,273㎡)
 - 이용객: 연 161천 명(일평균 440명, '20년 기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년 기준 이용객이 35%가량 감소함(연 248천 명/ 일평균 682명, '19년 기준)
- 공주시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홍보 및 역사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함
 - 온라인, 오프라인,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플랫폼 유지 관리, 역사주변 꽃 식재 등
- 현재 공주역에서 역세권으로 이동 시 승용차 접근 시간 30분 이상, 대중교통 접근 1시간 이상 소요 되어 역세권 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 시장 등의 지리적 한계가 있음¹¹⁾

11) 2017년 KTX 공주역 용역보고서



출처: 렛츠코레일 <기차역 안내>

[그림 III-15] KTX 호남선 및 공주역 위치

□ KTX 공주역 활성화 사업 추진

-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
 - 공주역 연결도로 구축 (22.1km, 왕복 4차로)
 - 탄천~KTX 공주역~세종시 구간
- KTX 공주역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
 - 공주시 이인면 일원 지방도(645,697호) 선형개량 3.05km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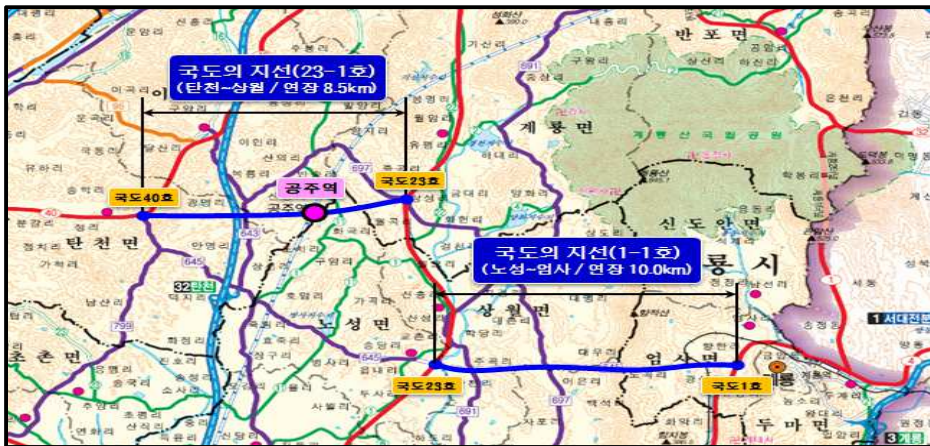


자료: KTX 공주역세권 활성화 사업 보고서, 공주시, 2021

[그림 III-16] 지방도 선형개량 위치도

□ 국도 지선 지정 연장

- 공주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결 교통망 확충 사업을 시행하여 관광객 유치 및 공주 지역 발전 제고
 - 국도 지선 (국1, 국23, 국40호) 지정, 탄천-상월 8.5km, 노성-염사 10km



자료: KTX 공주역세권 활성화 사업 보고서, 공주시, 2021

[그림 III-17] 공주시 국도 지선 연장 위치도

□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 사업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공주-세종 광역 BRT 사업이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임
- 공주-세종 광역 BRT 사업구간은 세종시 6-2 생활권인 한별리에서 공주시 산성동까지의 노선으로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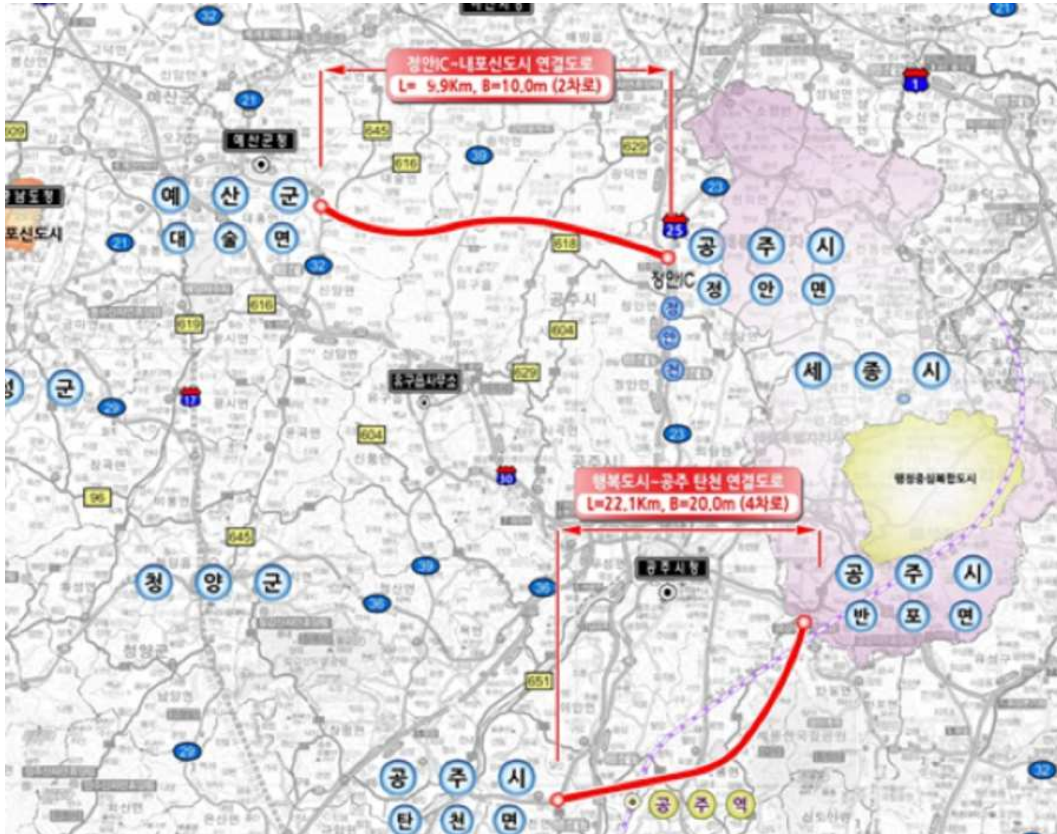
출처: 공주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 5월 기준

[그림 III-18] 공주-세종 BRT 노선도(안)

2) 광역도로망 확충

□ 광역도로망 확충 계획

- 내포신도시(충남혁신도시)와 공주역, 세종시를 연계하는 광역 도로망 확충 사업을 통해 공주시의 교통망을 확충하여 행정수도권으로서의 입지를 마련함
-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 사업
 - 2차로 도로 신설 계획으로 도로 길이는 9.9km이며 사업비는 1,822억 원(국비 1,276억 원)임
- 공주탄천-KTX 공주역-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
 - 왕복 4차로 신설 계획으로 도로 길이는 22.1km이며, 사업비는 4,446억 원(국비 3,335억)원임



출처: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3차)

[그림 III-19] 광역도로망 확충 계획

□ 광역도로망 확충 기대효과

- 대전혁신도시에서 세종정부청사까지 약 30km로 차량기준 약 50분 소요됨
- 현재 내포신도시-세종정부청사까지 현재 약 70km 거리로 차량기준 1시간 소요됨
 - 내포신도시에서 정안 IC 도로 확충으로 (55분 → 23분) 32분 가량 단축
- 공주시에서 세종정부청사까지 약 16km로 차량기준 약 30분 소요됨
 - 공주 탄천에서 행복도시 연결 도로 확충으로 (30분 → 20분) 10분 가량 단축



출처: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3차)

[그림 III-20] 광역도로망 확충 기대효과

5. 법률

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¹²⁾

□ 세종시법의 목적

- 세종시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함

□ 세종시법 상의 인접지역 상생 발전

- 세종시법 상 세종특별자치시의 인접 지역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3조(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2) 약칭 세종시법

□ 세종시법 상 공주시의 세종시 편입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의 일부는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편입한 구역으로 세종시법 상 인접지역 상생 발전 방안 마련에 대한 당위성을 가짐

제7조(관할구역)

-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길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 ③ 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길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 세종시법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설치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된 공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혁신도시법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¹³⁾

□ 혁신도시법의 목적

- 혁신도시법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공기관 이전관련 계획

-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장은 이전에 대한 사항 뿐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이전이 시행되는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13) 약칭 혁신도시법

□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경우 개별이전을 인정 받을 수 있음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2. 1. 17.>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 17.>

□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임대료 감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조세 감면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에서 용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용자할 수 있다.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6. 환경

가. 자연환경

□ 공주시의 자연환경

- 공주시는 북쪽에 차령산맥, 남동쪽에 계룡산이 주요 산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 금강이 관류하고, 유구천, 정안천, 대교천, 제민천, 혈저천 등 대소의 지류군이 합류되고 있음
- 국가하천(금강) 1개소, 지방1급하천(유구천) 1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의 총연장은 1,159km에 이르고 있음
- 차령산맥이 차가운 북풍을 막아 북쪽에 비하여 따뜻하나 내륙 분지로 금강의 영향을 받아 한서의 차이가 큰 대륙성 기후로 보이고 있음

□ 공주시의 기후

- 공주시는 기후적으로 중위도 상에 위치하여 온난다습한 기후지역에 속하며, 온대계절풍대로 한서의 차이가 심한 편임
- 기후 구분 상으로는 중부서안형과 남부서안형의 중간이나 북쪽은 아산만에서 약 42km, 서쪽은 천수만에서 약 40km 거리로 내륙적인 기후 특색을 나타내고 있음
- 공주의 봄철 평균 기온은 약 11.8°C로 대도시를 제외한 인근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공주의 봄철 기온은 서해안보다 약 0.5°C 정도 높고 인근 대전보다는 약 0.6°C 정도 낮음
- 여름철 공주의 평균기온은 약 24.7°C로 인근 부여의 24.5°C보다 높고, 대전의 24.6°C 보다 0.1°C 정도 높음
- 공주의 가을철 평균기온은 약 14.0°C로 대전의 14.7°C보다 0.7°C 낮고, 부여 14.2°C보다 약 0.2°C 낮음
- 충남지역의 겨울철 평균기온은 -1.5°C ~ 1.0°C 정도이며, 공주의 평균기온은 약 -0.9°C 정도임

나. 문화·관광

□ 행정수도권의 역사문화관광 거점

- 공주시는 백제 고도의 고장으로서 다양한 문화재와 금강 및 계룡산 등의 자연환경이 있어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수도권의 역사문화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충청지역 국악의 발원지로서 국립충청국악원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철화분청사기 전승지로서 전국 최초의 도예촌인 계룡산 도예촌을 보유함
- 공주시는 주변 시도에 걸쳐 금강과 계룡산 등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수도의 행태·환경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1) 공주시 문화재

□ 공주시 문화재 현황

○ 공주시는 총 158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47개, 도지정 문화재 75개 등을 보유하고 있음

- 31개의 문화재 자료와 5개 등록문화재, 57개의 공주시 향토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음

<표 III-12> 공주시 문화재 현황

(단위: 개)

구분 읍면동	총계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공주 시 향토 문화 유적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 무형 문화재	소계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 물	민속 자료			
유구읍	2							2	1		1				1
이인면	4							4	2		2				3
탄천면	3	1			1			2	1	1					8
계룡면	33	8	2	6				15	13	1	1		9	1	5
반포면	16	5		4	1			6	3		3		5		4
의당면	4	1			1			2	1	1			1		3
정안면	1							1	1		1				5
우성면	3							3		1	2				8
사곡면	19	5		5				8	8		1	1	5		4
신풍면	2							2	1	1					5
중학동	8	1		1				4	3		1			3	1
웅진동	41	23	14	5	3	1		10	7		3		7	1	4
금학동	7	1			1			5	1	1	3		1		
옥룡동	4							3	1		2		1		4
신관동	4							3	1		1	1	1		2
월송동	5	2			1		1	2	2				1		
계	158	47	16	21	8	1	1	75	46	6	21	2	31	5	57

출처: 제25회 2019 공주 통계연보

□ 공주의 세계유산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 8곳 중 공주의 2곳인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7개의 사찰 중 마곡사가 있음



1
백제역사 유적지구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2
공산성
공주시 금성동 83-51



3
송산리고분군
공주시 웅진동



4
신사,한국의 산지 승원
마곡사

출처: 공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그림 III-21] 공주시 세계문화유산

□ 계룡산 도예촌

- 공주 반포면 상신리 일원에 위치한 계룡산 도자예술촌은 계룡산 철화분청의 전승 복원을 목적으로 1993년 형성한 공동체 마을이며 전국 최초의 도예촌임
- 입촌 이후 현재 12명의 도예가가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철화 분청사기 축제, 도자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철화분청사기란?
 - 철화분청(鐵畵粉靑)은 백토분청의 표면에 철사(鐵砂)로서 초화문(草花紋), 조어문(鳥魚紋) 등을 장식한 분청사기의 한 예임
 - 기형으로는 소형의 술병과 접시, 사발 종류가 압도적이며 명문(銘紋)을 가진 것도 더러 있음. 연대는 대략 15-16세기로 추측되며 요지(窯址)로는 공주 계룡산요(鷄龍山窯)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계룡산이라고 부르기도 함



출처: 공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그림 III-22] 계룡시 도예촌

2) 공주시 관광자원

□ 충청유교문화권 역사문화관광권¹⁴⁾

-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함
- 충청유교문화권은 양반의 교육·학술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기술·교역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크게 4개의 관광권으로 구분되어 개발됨
 - 관유 관광권: 구곡관광권과 명승관광권으로 자연과 문화를 통해 심신 수양과 성장을 이끄는 문화 산수 관유(觀儒) 여행 공간
 - 사유 관광권: 배움관광권과 이야기관광권으로 유교의 철학적 지혜와 문화를 배우고 생각하는 유교문화 사유(思儒) 공간
 - 향유 관광권: 예술관광권과 실학관광권으로 예술과 과학문화를 누리는 예술과학 가치 향유(享儒) 공간
 - 풍류 관광권: 음식관광권과 누정관광권으로 지역별 토착화된 유교문화를 즐기는 풍미흥미 풍류(豊儒) 관광 공간



출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그림 III-23] 충청유교문화권 공간체계도

14) 참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금강 중심의 누정관광권

- 공주시는 충청유교문화권의 풍류문화권 중 누정관광권에 해당함으로써 유교문화관광지로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함
 - 금강을 따라 발달한 누정(누각·정자)은 선비의 지적활동장소로서 휴식·교류·사회·독서·피서·접대 등의 공간적 배경임
 - 누정문화권은 공주-부여-청주-세종시의 금강 누정을 따라 전통 축제, 음악, 놀이 등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다양한 경관성과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미래형 녹색 관광공간임
 - 사대부 문화의 중심지로서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정을 바탕으로 선비정신과 풍류문화를 주제로 한 관광루트로 조성예정임
- 금강 누정 40개소 중, 공주시가 15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9개소를 개발함
 - 공주(15개소), 세종(7개소), 부여(18개소)



<풍류관광권>



<금강 누정선유길>

출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그림 III-24] 풍류관광권과 금강 누정선유길

□ 누정관광권 개발계획

- 금강 누정선유(船遊)길 조성으로 경관·체험 관광권을 개발함
- 금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누정을 따라 선비의 풍류문화인 문학, 다도, 뱃놀이, 음악 등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루트를 조성 예정임

7. 시사점

□ PESTLE 분석 시사점

-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률, 환경 분야의 분석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환경분석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그림 III-25] 공주시 PESTLE 분석 시사점

□ 정치

- 정부는 각 권역에 혁신도시 등을 지정하여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였고, 대전혁신도시와 충남혁신도시를 신규로 지정하여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으로 청와대, 국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성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 경제

- 공주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관광활동과 관련한 숙박, 음식, 도소매 등의 산업체와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세종시 출범으로 인구와 토지 유출로 토지와 산업체, 인력 등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음
- 2021년 기준 예산 및 재정현황은 세입세출 약 8,459억 원으로 유형지방단체 평균 대비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자주도는 평균보다 높음

□ 사회

- 공주시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로 인구가 급감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토지면적 76.1km²을 세종시로 편입하며 손실을 입음
- 인구는 약 10만 명 가량으로 성비는 5:5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신관동과 월송동에 공주시 인구의 30% 이상이 밀집거주하고 있어 지역의 편차가 큰 편임
- 충남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과 동헌스마트창조도시 개발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음

□ 기술

- KTX 공주역 활성화 사업으로 세종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공주역 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연계하는 BRT 노선을 구축하고 있음
- 광역도로망 확충계획으로 내포신도시-정안IC, 공주탄천-KTX 공주역-세종시 도로 연결, 광역철도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확충으로 공주시의 기술적 환경을 제고하고 있음

□ 법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상에 인접지역 상생발전 시책으로 공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공공기관 이장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경우 개별이전이 가능함

□ 환경

- 공주시는 금강과 계룡산 등의 생태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백제고도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158개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역사문화의 도시임
- 백제문화 뿐만 아니라 충청유교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권으로서 조선양반문화가 발전한 고장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수도권의 역사문화관광거점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여건임

IV. 공공기관 분석

1. 공공기관 이전
2. 공공기관 선정
3. 공공기관 분석

IV. 공공기관분석

1. 공공기관 이전

가. 공공기관 이전 기본방향

1) 정부

□ 정부 공공기관 이전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1차 이전을 추진하여 2019년 12월까지 153개 기관을 각 권역의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 완료하였음
-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2021년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나 충남혁신도시와 대전혁신도시를 신규로 지정하는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준비를 하고 있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관련,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혁신도시법 제29조)이나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 지자체로의 이전이 가능함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가균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2) 충청남도

□ 충청남도 공공기관 이전

- 충청남도는 중앙집중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의 발전을 제안하고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 부흥전략을 준비하고 있음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성장동력 TF를 구성하고 지역핵심사업을 실행함
-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로 준비하고, 역사·문화와 관련된 기관은 공주시와 부여군 등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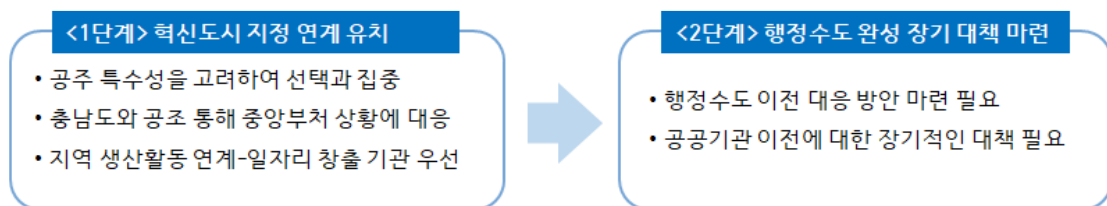
3) 공주시

□ 공공기관 유치 대응방안

- 공주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하여 2020년 11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함
- 분원·단체·협회 등의 유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본청 유치 기반 마련
 - 혁신도시 입주는 세제혜택 등이 있으나 개별 입주는 유인책 등 인센티브가 없어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유치 가능
 - 본청 유치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준 공공기관, 중앙부처와 연계된 단체·협회 및 분원」 등에도 관심 필요
- 개별 이전 의향 분석 필요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의향이 있는 기관에 적극적인 유치활동 필요(공주시에 우호적 여건 조성)
 - 국·공유지, 원도심 유휴 건물 활용방안 등 유치 대상지 적극 검토
- 역사문화 수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논리 개발 필요
 - 공주시는 대전·세종과 인접해 있어 공공기관 유치에 지리적으로 최적의 장소
 - 높은 지가에 따른 적절한 부지확보 문제 해결이 유치 성공의 관건

□ 공주시 기관유치 기본방향

- 공주시는 수도권과 접근이 용이하고 세종정부청사가 연접하여 업무연계성이 양호함
- 사통발달의 육로가 방사형으로 뻗어 있는 중부권 최적의 교통 요충지
- 행정수도 이전 및 완성 등 개발여건 호재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 대부분이 임야(산지)로 공공청사 부지개발에 어려움 상존



출처: 정부의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추진계획. 공주시, 2021.

[그림 IV-1]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기본방향

□ 기관유치 추진체계

- 민·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지지 및 상생발전 공주시 대책위원회」를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
 -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전환: 민간 자문단 + 공공기관 이전 유치 T/F
 - 민간자문단: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대응 전략 및 논리 개발
 - 공공기관 이전 유치 T/F: 부지확보 및 유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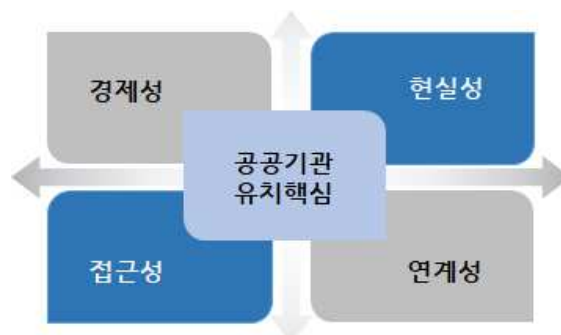
<표 IV-1>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 체계

팀명	담당부서	인원	기능
총괄	미래전략팀	1	유치총괄, 대상기관 발굴, 지원사업 추진
입지지원	재산관리팀 도시계획팀	2	부지선정 및 관련법(도시계획 등) 검토
부지조성	도시개발팀 개발행위팀	2	공공청사 부지조성, 인허가 사항 검토 및 지원
기관유치	6개과	6	기획예산담당관(4개기관), 평생교육과(1개기관), 문화체육과(2개기관), 여성가족과(1개기관), 환경보호과(1개기관), 산림경영과(1개기관)

출처: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주통계, 2021년 4월 30일 기준

□ 기관유치 핵심요소

- 경제성: 부지매입비용 및 조성비용의 경제효과
- 현실성 : 적정면적 확보 및 부지이용 시기성
- 접근성 : 대중교통 및 자가 교통 접근성, 인접도로와의 관계
- 연계성 : 주변 개발계획이나 연계 가능시설 분포 여부



출처: 정부의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추진계획. 공주시. 2021.

[그림 IV-2]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핵심요소

□ 공공기관유치위원회 등 유관 협의

-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전략사업에 맞는 주무기관의 하위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함
 - 생태·환경, 문화·관광, 연수·연구 분야 →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집중
 - 공주시는 혁신도시와의 연계보다 세종시 본청(중앙단체)의 산하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효율적
- 적극적 유치활동 이전에 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지구지정, 부지확보, 도로(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 공주시의 공공기관 우선 유치에 대한 방법을 촉구해야 함
 - 세종시와의 법적 약속인 인접지역 상생지원방안에 대한 요구로 공공기관 우선 유치 및 지원에 대한 방법을 촉구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둔다.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함
 -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것이 아닌 공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 정립
 - 공주의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지속하여 문화·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개선
 - 공주의 문화·교육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
- 단순한 개별 공공기관의 유치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전대상의 목록에는 개별 기관이 아닌 중앙부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관이 있으므로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전략적인 연계 유치 계획이 필요함
 - 공주시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충청남도 뿐 아니라, 타 권역 혁신도시와의 협의가 필요

- 객관적인 유치 전략과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장애 요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연계 관련, 충청남도과 혁신도시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
 - 공공기관 유치대상의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
 - 백제고도와 같은 식상한 표현이 아닌 전국에 공주시의 이미지를 혁신할 수 있는 신선한 비전과 목표를 마련

나. 공공기관 유치 장애요인

□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장애요인

- 공주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극복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함
- 공주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정주여건 미흡, 공공기관 이전시 직원 이탈, 충남·대전 혁신도시와 경쟁구도, 관련제도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장애 요인이 있음



[그림 IV-3]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장애요인

2. 공공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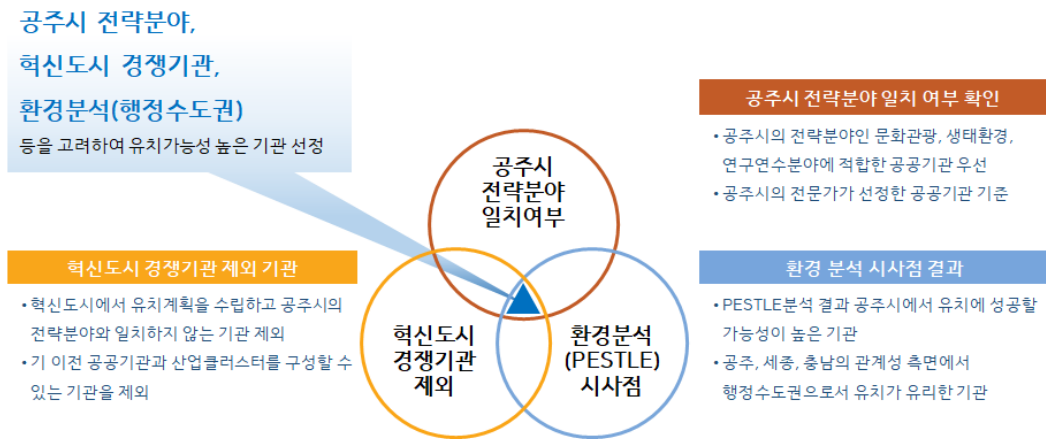
가. 공공기관 유치대상 선정 기준

□ 유치대상 선정 기준 설정

-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치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각 기관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유치 계획을 수립함
- 유치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주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객관성과 당위성을 확보함
-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 유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함

□ 유치대상 선정 기준

-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 대상 선정을 위해 공주시 전략분야 일치여부, 혁신도시 경쟁기관 제외, 환경분석 시사점 결과를 분석하여 공주시 기관유치에 최적화된 기관을 선정함
- 공주시 전략분야와 일치여부 확인
 - 공주시의 전략분야인 문화관광, 생태환경, 연구연수분야에 적합한 공공기관 우선
 - 공주시의 전문가가 선정한 공공기관 기준
- 혁신도시와 경쟁구도에 있는 기관을 제외하여 기관 선정에 효율성을 꾀함
 - 혁신도시에서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공주시의 전략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기관 제외
 - 기 이전 공공기관과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을 제외
- 환경분석(PESTLE)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공주시가 전략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PESTLE분석 결과 공주시에서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
 - 공주, 세종, 충남의 관계성 측면에서 행정수도권으로서 유치가 유리한 기관



[그림 IV-4] 공공기관 유치대상 선정 기준

- 제시한 공공기관 유치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을 분류하고 분류된 기관 중 교집되는 부분의 공공기관을 추출하여 유치 가능성 등을 분석함
- 또한, 선정 기준 이외에 행정수도 완성에 따라 대비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함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략으로 국회, 청와대 이외에 수도권에 잔류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고자 함
 -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의 5개 부처로 이 중 대통령 외치 (외교, 통일, 안보)에 비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우선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산하 기관이 인근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나. 공공기관 유치대상 선정 과정

□ 공공기관 유치대상 선정 과정

- 공공기관 유치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122개 이전가능 대상 공공기관을 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치 대상을 선정함
- 공주시 전략분야 일치기관, 유치가가능성이 있는 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공주시 전략분야 불일치 기관, 혁신도시 경쟁 제외기관으로 분류하여 유치가가능 대상을 선별함

- 이 중 공주시 전략분야 불일치 기관과 혁신도시 경쟁제외기관은 유치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공주시 전략분야 일치기관, 유치가능성이 있는 기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을 분류하여 교집되는 부분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함

<표 IV-2> 유치대상 공공기관 분류

분류기준	기관
공주시 전략분야 일치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유치가능성이 있는 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보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주시 전략분야 불일치 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항공안전기술원, (주)한식재단,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혁신도시 경쟁 제외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나노기술원, 통일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코레일관광개발(주), 국방전직교육원, 코레일네트웍스(주), IOM 이민정책연구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출입은행,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투자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석유관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체육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문학번역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문화정보원, 노사발전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국방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예금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정부법무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의로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환경보전협회, 한국벤처투자, 한국환경공단, 한국발명진흥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코레일로지스(주),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문화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 유치 대상 1차 분류

- 공주시 전략분야 일치기관과 기타 유치 가능기관을 1차로 도출하고 이전 가능 중점대상 기관의 이전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표 IV-3> 유치대상 1차 분류 및 기관 정보

분류기준	소관부처	기관명	소재지	종사자수	주요기능	비고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 강서구	140	문화예술 창달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평가 등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 종로구	65	공예·디자인·전통생활문화 의 확산과 진흥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생태환경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 은평구	510	환경 R&D 사업관리, 환경산업 육성지원	문화복지국 (환경보호과)
연구연수	국무조정실	한국행정연구원	서울 은평구	130	행정제도 및 운영사항 연구와 체계적 자료수집	기획예산담당관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서울 서대문구	113	동북아시아 고대사 연구, 주변국 한국사 인식연구 등	시민자치국 (평생교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울 강남구	183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 중구	157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	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 서초구	184	가족의 삶의 질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기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 고양시	173	노인일자리 연구,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사업 종사 훈련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서울 서초구	100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한국문화를 교육	시민자치국 (평생교육과)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서울 용산구	375	보육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수행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서울 용산구	80	문화유산 보존계승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	문화복지국 (문화재과)
	행정안전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서울 종로구	51	일제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자료: 공공기관 알리오, 2020.12. 기준

□ 이전 대상기관

- 공주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분류하고 대상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분석함
- 기관별로 타 권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현재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지방 이전 시 필요한 최소 면적을 산출함
 - 필요면적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공청사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현원을 기준으로 최소면적으로 산정
 - 기관별로 필요한 기타의 시설을 제외하고 사무와 관련한 최소면적으로 산정
- 신도시인 송선동현지구의 공공업무시설 계획 면적이 10,196㎡이며 동현스마트창조도시에도 약 14만㎡ 가량의 공공업무시설 부지를 계획하고 있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4> 대상기관 유치희망지역 및 필요면적

기관명	유치희망지역	종사자수	필요면적	비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남/경주/제주	140	3234.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충남/경주	65	2107.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충남/강원/전남/대구	510	8763.1	
한국행정연구원	-	130	3085.1	
동북아역사재단	대전/포항	113	2757.3	
한국과학창의재단	충남/포항/대전	183	3765.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춘천/원주	157	3388.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84	388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73	3665.0	
세종학당재단	대전	100	2586.3	
한국보육진흥원	-	375	6622.8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경주/대전	80	2294.7	국립중앙박물관 연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51	1936.7	부산 유치가능성 높음

다. 유치가능 중점대상기관 선정

□ 유치가능 중점대상기관

- 공주시에서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의 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에 따라 유치 가능성이 높은 12개 기관을 도출함
- 우선 유치 6개 기관, 유치 가능 6개 기관, (조건부 유치 5개 기관)

1	우선유치기관	2	유치가능기관	3	여성가족부 하부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6개 기관		6개 기관		5개 기관

[그림 IV-5] 공주시 유치가능 중점대상기관

<표 IV-5> 공주시 유치가능 중점대상기관 선정

구분	내용	기관명	비고
우선 유치	· 우선 유치기관은 현재 공주시에서 유치계획을 세울 경우 가장 유치가능성이 높은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보육진흥원	
유치 가능	· 유치가능기관은 공주시유치희망 기관 중 혁신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며 관련산업의 클러스터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곳 이거나, 타 권역 유치가능성이 높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조건부 유치	· 여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여성가족부 하부 기관 전체 유치 노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현원 기준으로 여성가족부 하부기관 전체 이전 시, 최소필요면적은 14,48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공공기관 분석

□ 중점대상 공공기관 분석 방향

-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따른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선정한 12개 공공기관의 현황 및 환경 등을 분석하여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로 활용함
- 6개 우선유치대상 공공기관, 6개 유치가능대상 공공기관, 5개 조건부유치대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가. 우선유치 공공기관 분석

□ 우선유치 공공기관

- 우선유치 공공기관은 6개 기관으로 공주시의 주력 산업 분야와 일치하고 행정수도권인 공주시의 문화관광거점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함에 이점이 있는 기관임
- 6개 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보육진흥원임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역사문화관광거점으로서의 입지 확보

<표 IV-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02년 12월 4일
설립근거	·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설립목적	·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동)
임직원수	· 정원 142명, 현원 114명 ('21.4.기준) · 임원(1), 정규직(87), 무기계약직(26), 비정규직(29)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 · 여가문화 및 지역관광 조사·연구 · 북한 문화예술 및 관광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산업
특징	· 임직원 중 여성이 58%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유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나주로 이전 · 기관특성상 국내 출장 및 해외 출장의 빈도가 높아 교통망 중시 (현재 김포공항 인근소재)
조직도	

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전통문화 경쟁력 제고

<표 IV-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10년 4월 1일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설립목적	· 창의적인 공예문화, 디자인문화, 전통생활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2, 해영빌딩 4-5층(공예·디자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8층(한복진흥·전통생활문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1길 KCDF 갤러리
임직원수	· 정원 68명, 현원 64명 ('21.4.기준) · 임원(1), 정규직(55), 무기계약직(7), 비정규직(26)
주요기능	· 한국공예디자인 및 전통생활문화의 확산과 진흥 · 공예문화산업 경쟁력 및 국민체감형 공공디자인 강화 · 전통생활문화 가치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특징	· 임직원 중 여성이 64%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 · 문화역 서울284사업, 갤러리 등은 서울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어려운 부분

조직도



3)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행정체제 경쟁력 제고

<표 IV-8> 한국행정연구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1991년 09월 27일
설립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설립목적	·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행정발전에 이바지함
주무기관	· 국무조정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235
임직원수	· 정원 132명, 현원 110명 ('21.7.기준) · 임원(1), 정규직(104), 무기계약직(5), 비정규직(21)
주요기능	· 조직·인사·재무·규제·평가 등에 관한 행정 제도·운영 및 정책 연구 · 정부혁신·사회통합·재난안전·글로벌행정 등에 관한 행정 제도·운영 및 정책 연구 · 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생산·수집·관리·지원
특징	· 임직원 중 여성이 43.8%로 여성의 비율이 낮음 · 순환 근무 없이 한 곳에서 근무 · 임원급 연구원에게 개별 연구실 제공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취약계층 친화도시 경쟁력 제고

<표 IV-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05년 12월 27일
설립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설립목적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 교육훈련 등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와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
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중산동 1701)
임직원수	· 정원 173명, 현원 145명 ('21.7.기준) · 임원(1), 정규직(123), 무기계약직(21), 비정규직(6)
주요기능	·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특징	·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시너지가 예상 됨 ·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지속적인 사업 확대 기대됨

조직도



5) 세종학당재단

○ 세종학당재단이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한류문화 거점 도시 경쟁력 제고

<표 IV-10> 세종학당재단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12년 10월 24일
설립근거	·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설립목적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총괄·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면적	· 2,769.84㎡
임직원수	· 정원 100명, 현원 82.25명 ('21.7.기준) · 임원(2), 정규직(37.25), 무기계약직(43), 비정규직(13)
주요기능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한국문화교육 누리집(누리-세종학당)개발·운영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특징	· 현지 파견 근무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시너지가 예상됨 · 한국어 교육 사업의 확장으로 사업의 발전 예상됨
조직도	

6)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보육진흥원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가족친화도시 경쟁력 제고

<표 IV-11> 한국보육진흥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2009년 12월 23일
설립근거	영유아보육법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설립목적	효과적인 보육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체계적인 보육정책 지원을 통한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등 수요자의 만족에 기여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4, 5, 6층
면적	2,437.11㎡
임직원수	· 정원 375명, 현원 127명 ('21.7.기준) · 임원(1), 정규직(102.375), 무기계약직(203), 비정규직(52)
주요기능	· 어린이집 평가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 보육 관련 콘텐츠 개발
특징	· 임직원 중 여성이 81.6%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 · 계약직 비율이 높아 채용이 잦음 · 육아 휴직이 잘 되어있음 · 보건 복지부와 시너지 예상됨
조직도	 <p>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p> <p>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원 이사회 중앙부여운영지원센터 경영기획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기획팀 핵심성과팀 인재육성팀 운영홍보팀 안전정보팀 평가사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획팀 평가지원팀 현장평가팀 사후관리팀 교육원지용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획팀 자격관리팀 교육운영팀 교육원지원팀 상업사업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반팀 융합지원팀 원자조사지원팀

나. 유치가능 공공기관 분석

□ 유치가능 공공기관

- 유치가능기관은 공주시 유치희망 기관 중 혁신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며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곳 이거나, 타 권역 유치가능성이 높은 기관임
- 우선유치 공공기관과 더불어 유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기관으로 유치가능 6개 공공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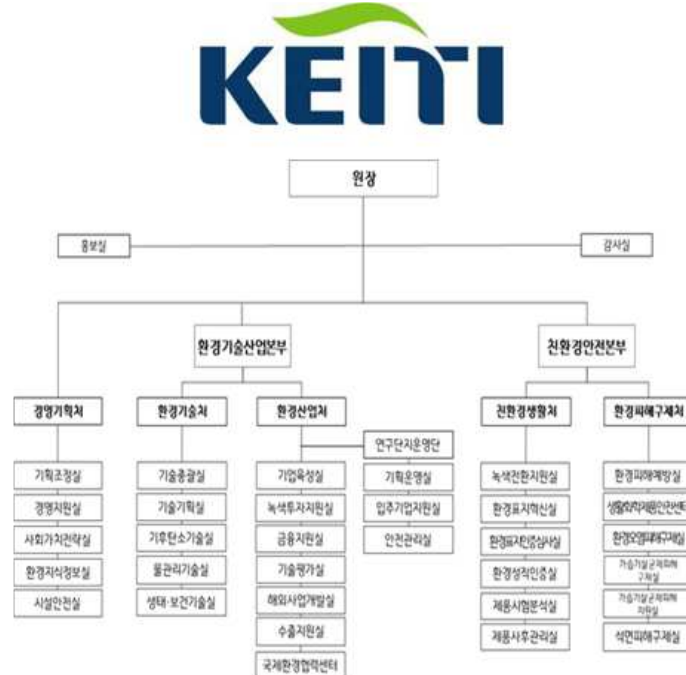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환경기술개발의 경쟁력 제고

<표 IV-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09년 4월 8일
설립근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설립목적	·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주무기관	· 환경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면적	· 1,124.5㎡
임직원수	· 정원 671명, 현원 585.65명 ('21.7.기준) · 임원(3), 정규직(349.65), 무기계약직(233), 비정규직(33)
주요기능	·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환경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
특징	· 임직원 중 여성이 53.6%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인천 광역시에 연구단지 존재 · 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통합으로 개원

조직도



2)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바른 역사인식거점 경쟁력 제고

<표 IV-13> 동북아역사재단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06년 09월 22일
설립근거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목적	·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지속적·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전략적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주무기관	· 교육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면적	· 574.18㎡
임직원수	· 정원 114명, 현원 109명 ('21.7.기준) · 임원(2), 정규직(77), 무기계약직(30), 비정규직(8)
주요기능	·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특징	· 임직원 중 여성이 40.2%로 여성의 비율이 낮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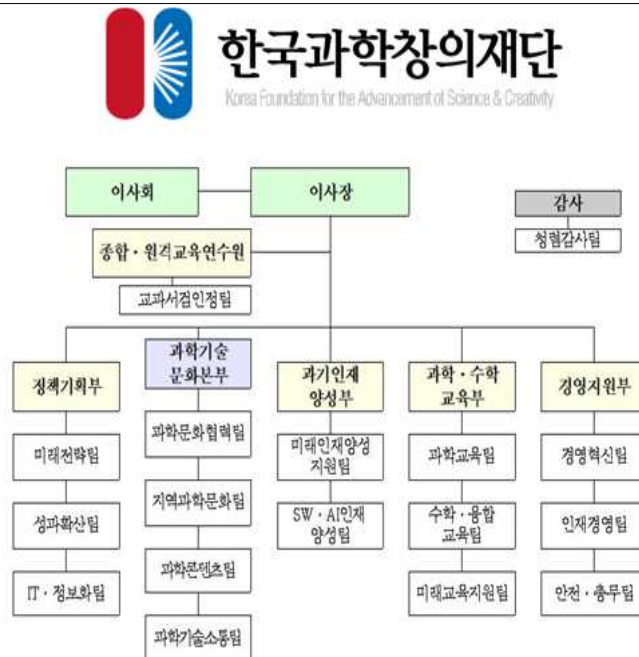
3)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과학창의재단 유지를 통해 공주시의 기술 및 연구 이미지 구축

<표 IV-14> 한국과학창의재단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1967년 12월 21일
설립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설립목적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보급·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며, 국민의 창의성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무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 5층 ~ 14층
면적	· 3,751.2㎡
임직원수	· 정원 184.8명, 현원 163.375명 ('21.4.기준) · 임원(1), 정규직(131.375), 무기계약직(31), 비정규직(18)
주요기능	·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 과학기술문화활동,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및 담당단체의 육성·지원
특징	· 도사구입비, 자기개발비 지원 등 사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교육부와 업무 연관이 높아 시너지 예상

조직도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건강도시 경쟁력 제고

<표 IV-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14년 07월 29일
설립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설립목적	· 국민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의 기여
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임직원수	· 정원 159명, 현원 127명 ('21.7.기준) · 임원(1), 정규직(111), 무기계약직(15), 비정규직(22)
주요기능	·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특징	· 임직원 중 여성이 77.6%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 ·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시너지가 예상됨. · 여성의 비율이 높아 육아 휴직 등 가족친화제도가 발전 됨



5)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문화예술거점 도시경쟁력 제고

<표 IV-16>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04년 07월 20일
설립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설립목적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이용촉진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 ·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증진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문화상품 개발과 박물관 내 편의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익 도모
주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임직원수	· 정원 80명, 현원 66명 ('21.7.기준) · 임원(1), 정규직(32), 무기계약직(33), 비정규직(23)
주요기능	· 국립박물관 공연장 운영 ·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 및 보급 ·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특징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국립중앙박물관과 긴밀한 업무가 필요 · 익산, 대구, 경주, 광주 등의 지역에 문화점 운영
조직도	

6)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역사의식 거점도시 경쟁력 제고

<표 IV-17>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14년 06월 03일
설립근거	· 「민법」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설립허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설립목적	·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추념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과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으로 국민통합과 평화와 인권신장에 기여
주무기관	· 행정안전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마빌딩)
임직원수	· 정원 51명, 현원 45명 ('21.7.기준) · 임원(0), 정규직(23), 무기계약직(13), 비정규직(9)
주요기능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도순례 등 위령사업 · 해외 추도공간 조성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 학술사업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복지지원, 역사관 운영·관리 등
특징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광역시 남구) 운영

조직도



다. 조건부유치 공공기관 분석

□ 조건부유치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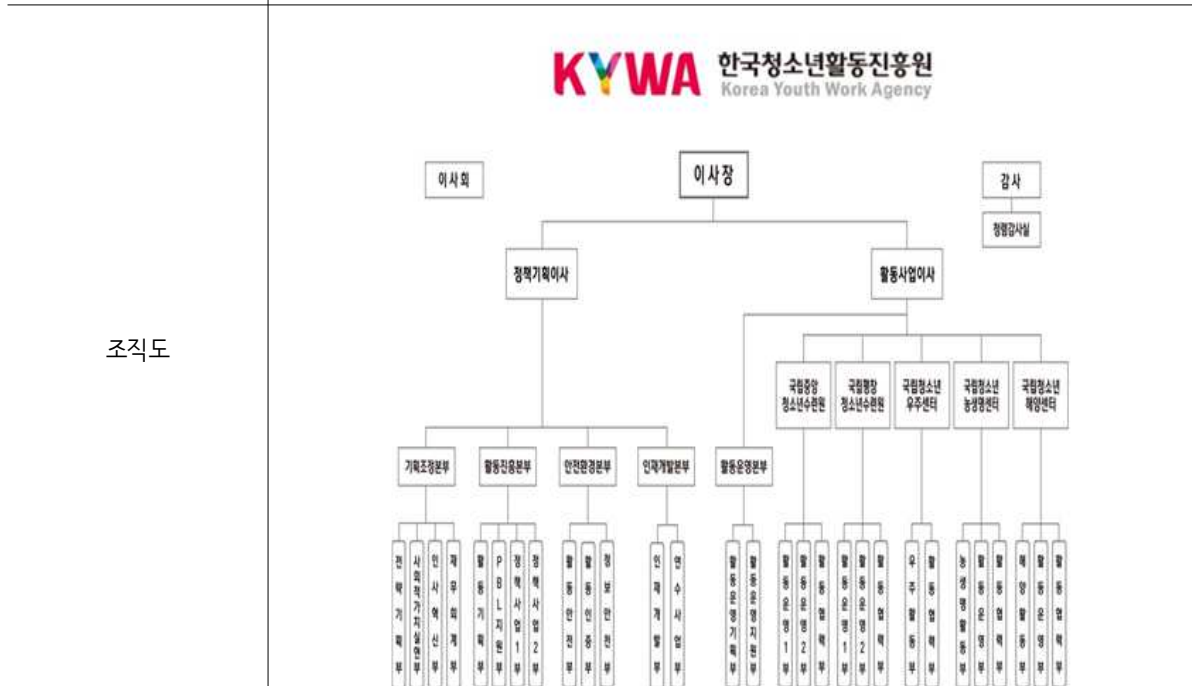
- 조건부유치 공공기관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공주시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임
-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5개 기관 중, 우선이전 가능성이 높은 여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주시가 하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여성가족부의 하부 공공기관은 5개 기관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임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가족친화도시 경쟁력 제고

<표 IV-1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10년 08월 18일
설립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설립목적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무기관	· 여성가족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47 2, 5층
면적	· 1076.75㎡
임직원수	· 정원 404명, 현원 356명 ('21.7.기준) · 임원(2), 정규직(266), 무기계약직(87), 비정규직(1)
주요기능	·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특징	· 서울/고흥/천안/ 김제 등 정직원 지방 순환근무 ·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여가부 세종시 이전시 시너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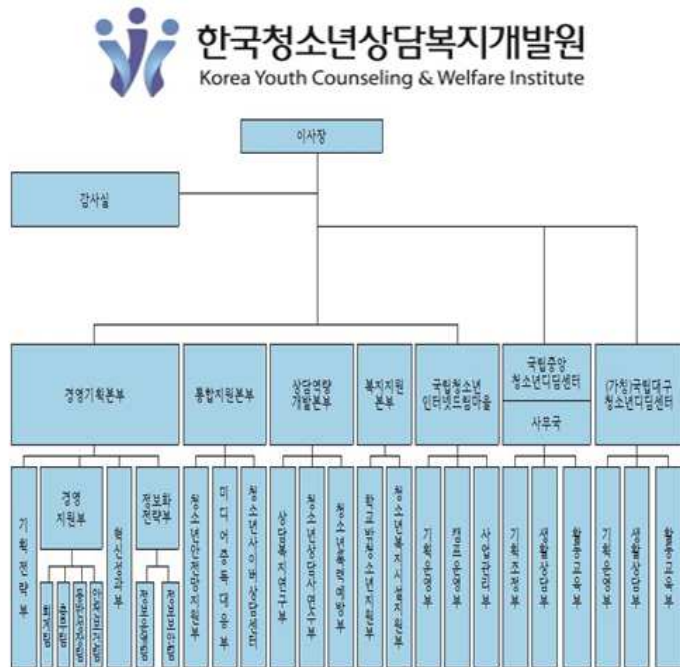
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가족친화도시 경쟁력 제고

<표 IV-1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1993년 02월 15일
설립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설립목적	·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설립
주무기관	· 여성가족부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임직원수	· 정원 236.5명, 현원 207.5명 ('21.4.기준) · 임원(1), 정규직(64), 무기계약직(142.5), 비정규직(41)
주요기능	·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 자료의 제작·보급
특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운영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무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 운영중이며 국립 대구 청소년디딤센터 개원예정

조직도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여성인권 경쟁력 제고

<표 IV-2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03년 03월 05일
설립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설립목적	· 진흥원은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 ·別に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의 조성에 기여함이 목적
주무기관	· 여성가족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면적	· 사무실1203㎡ 강의실 4,629.26㎡
임직원수	· 정원 123명, 현원 105명 ('21.7.기준) · 임원(1), 정규직(50), 무기계약직(54), 비정규직(11)
주요기능	·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 여성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등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 공무원 및 일반인 등에 대한 성인지교육
특징	· 여성의 비율이 60.7%로 높은 편임. · 양산 하북면, 고양 덕양구 등 교육 센터 및 캠퍼스 운영 중

조직도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가족친화도시 경쟁력 제고

<표 IV-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15년 01월 01일
설립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설립목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 도모
주무기관	· 여성가족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4-6층
면적	· 3,888㎡
임직원수	· 정원 184명, 현원 166명 ('21.7.기준) · 임원(1), 정규직(117), 무기계약직(48), 비정규직(110.75)
주요기능	· 가족서비스 기획 및 개발 · 가족서비스 품질관리 및 고도화 · 가족서비스 지원인력 전문역량 강화
특징	· 임직원 중 여성이 77%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아이돌봄 지원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각 지역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조직도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유치를 통해 공주시의 여성친화도시 경쟁력 제고

<표 IV-2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설립일	· 2019년 12월 19일
설립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설립목적	· 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우리사회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성평등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는 사회실현에 기여
주무기관	· 여성가족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50(중림동, CENTRAL PLACE) 3층
면적	· 1257.98㎡
임직원수	· 정원 119명, 현원 99.25명 ('21.7.기준) · 임원(1), 정규직(65.5), 무기계약직(32.75), 비정규직(46)
주요기능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특징	· 기간제 비정규직이 많아 채용이 잦음 · 여성의 비율이 98.9%으로 월등히 많음 (남성 직원 1명)

조직도



V.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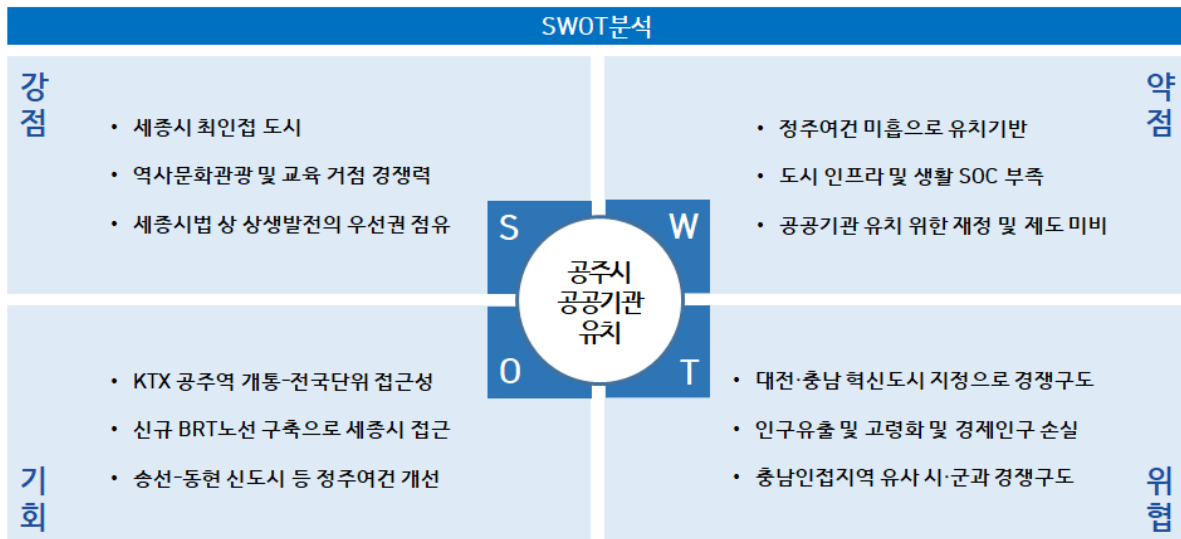
1. 공주시 SWOT 분석
2. 기본구상
3. 전략과제별 사업추진

V. 기본구상

1. 공주시 SWOT 분석

□ 공주시 SWOT 분석

- 사업환경 분석, 지역환경 분석, 공공기관 분석을 통하여 공주시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알아볼 수 있는 SWOT 분석을 실행함
-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따른 공주시의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SWOT 분석을 통해 공주시의 현안을 분석하고 향후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전략적 이슈를 도출하여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의 경쟁력을 제고함



[그림 V-1] 공주시 SWOT 분석

□ 강점

- 공주시는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최인접 도시로서 행정복합도시로의 가장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
- 백제고도, 충청유교문화권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통적 교육도시로서 충청권 교육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세종시법 상 인접지역 상생발전의 지원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유치에 유리한 점이 있음

□ 약점

- 다양한 계획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정주여건은 부족한 상태이며, 정주여건 미흡으로 인한 공공기관 유치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음
- 이에 따른 도시인프라 및 생활 SOC가 부족하여 인구유입의 기회가 적음
-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재정 및 제도가 타 권역에 비해 미비한 상태임

□ 기회

- KTX 공주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주역과 공주시, 공주역과 세종시 연계 등 충청권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세종시 연계 BRT노선 구축, 국도 연장계획, 광역철도 구축 등의 다양한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으로 행정수도의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이 가능함
- 충남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과 동헌스마트창조도시 등의 신규 개발로 주거시설과 업무 시설 등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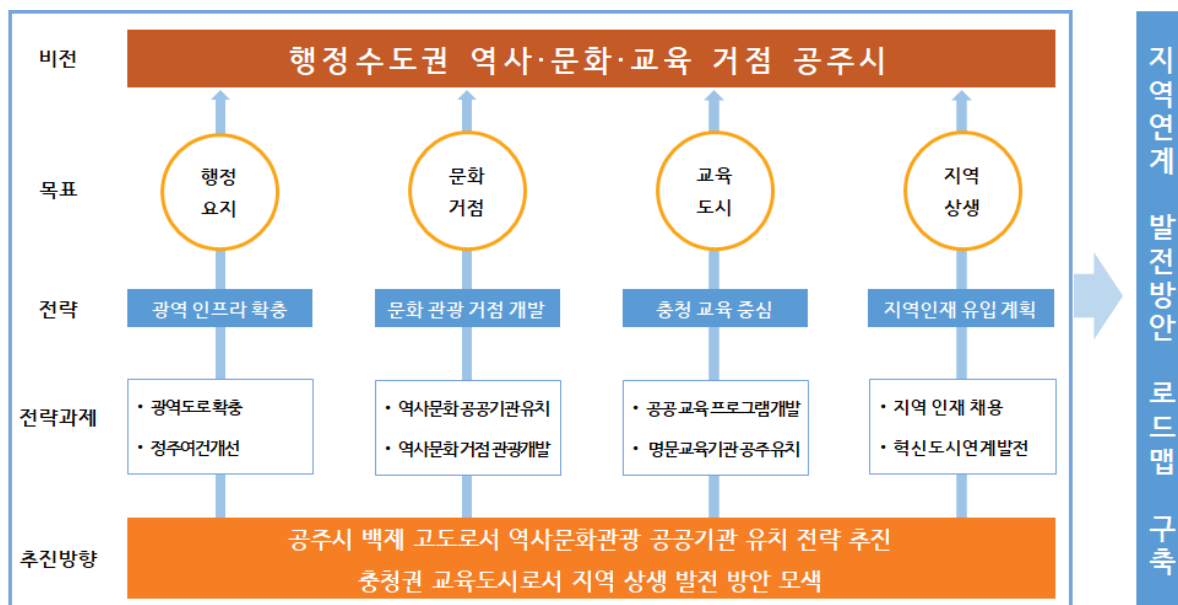
□ 위협

- 인접한 대전혁신도시와 충남혁신도시의 지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와 경쟁구도에 놓임
- 인구와 토지 유출, 인구 고령화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손실이 발생함
- 청주, 부여, 천안, 아산 등의 세종 인접지역의 유사 시·군과 경쟁구도를 가지고 일부 시군의 경우 전략분야가 일치하여 공공기관 유치의 경쟁률이 높음

2. 기본 구상

□ 기본구상

- 사업환경분석, 지역환경분석, 공공기관분석을 기반으로 공주시의 SWOT분석을 통해 공주시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함
-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따른 공주시의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계획하여 공주시의 발전을 제고함



[그림 V-2]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기본구상

가. 비전과 목표

□ 비전

- 공주시는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상생 등을 위하여 “행정수도권 역사·문화·교육 거점 공주시”를 비전으로 설정함

□ 목표

- 행정수도권 역사·문화·교육거점으로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요지, 문화거점, 교육도시, 지역상생의 4가지 목표를 설정함

나. 전략 및 전략과제

- 기본구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별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별로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공주시의 공공기관 유치의 경쟁력을 제고함

□ 목표별 전략

- 행정요지로서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광역인프라 확충을 전략으로 설정함
- 문화거점으로서의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문화관광거점 개발 전략을 설정함
- 교육도시로서의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충청교육의 중심으로 전략을 설정함
- 지역상생을 위한 공주시의 노력으로 지역인재 유입계획을 전략으로 설정함

□ 목표별 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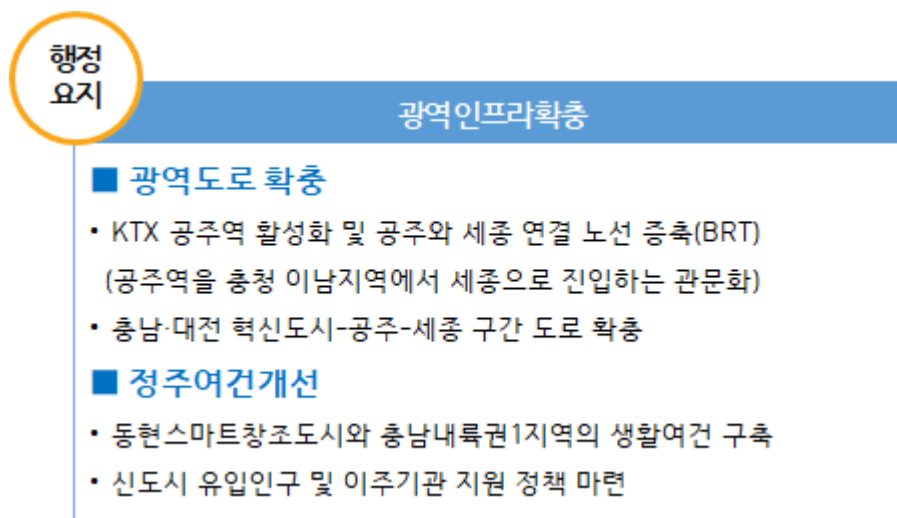
- 행정요지 목표의 광역인프라 확충 전략과제로 광역도로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설정함
- 문화거점 목표의 문화관광거점 개발 전략과제로 역사문화관광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역사문화 거점의 관광 개발을 설정함
- 교육도시 목표의 충청교육중심 전략과제로 공공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명문 교육기관 공주 유치 사업을 설정함
- 지역상생 목표의 지역인재 유입계획 전략과제로 지역인재 채용과 혁신도시 연계발전을 설정함

3. 전략과제별 사업추진

가. 행정요지

□ 행정요지 전략과제 사업

- 행정요지 목표의 광역인프라 확충 전략의 세부과제로 광역도로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실행함



[그림 V-3] 행정요지 전략과제

1) 광역도로 확충

□ KTX 공주역 활성화 및 BRT 노선 구축

- 공주시 이인면에 위치한 KTX 공주역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여 공주역세권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함
- KTX 공주역 연계 관광상품 활성화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공주역을 이용 수요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공주역세권 개발을 위한 상업 및 숙박시설, 공공시설을 신규 구축 또는 보완하고 관광콘텐츠 개발 진행
-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신설을 통해 공주역 및 신도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 개선과 도심연계형 통합교통망을 구축함
 - 구축 계획이 있는 세종시에서 공주시청 구간의 BRT 노선에 공주역이 있는 이인면으로 연장하여 BRT노선을 구축함

- 노선 내에 충남내륙권1지역 및 동현스마트창조도시의 노선을 구축하여 신도시로의 접근성을 높임

□ 혁신도시-공주-세종 구간 도로 확충

- 국도 지선 연장 및 신설을 통해 공주시와 세종시, 신규지정된 혁신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임
 - 호남고속철도 KTX 공주역을 중심으로 국도 40호와 국도23호를 동서로 연결하고, 국지도 96호와 국도 40호를 연결하여 국도기능을 보완함
- 수도권 및 충청권의 접근성 개선으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인근지역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 정주여건 개선

□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유입

- 신도시 개발로 주거시설과 생활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및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 동현스마트창조도시와 충남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구체화 하여 양질의 생활여건을 조성함
 - 동현스마트창조도시 28만㎡ 개발, 충남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94만㎡ 개발을 진행함
 - 동현스마트창조도시의 부지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주로 이전하되, 충남내륙권 1지역의 공공업무시설 부지를 늘려 공공기관 유치 기반을 확충함
- 신도시 개발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가 신도시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공주시의 인구 증가와 인력 개선을 준비함

□ 이주기관 지원정책 마련

- 동현스마트창조도시와 충남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인구 유입을 준비하고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
- 공공기관이 이전과 정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주기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이 이주에 필요한 자금 및 정책 지원 등의 조례 등을 제정

나. 교육도시

□ 교육도시 전략과제 사업

- 교육도시 목표의 충청 교육의 중심 전략 세부과제로 공공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명문교육기관의 공주유치 사업을 실행함



[그림 V-4] 교육도시 전략과제

1) 공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공주형 공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통적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공주시가 충청권의 교육도시이자 행정수도권의 교육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함
- 공주시만의 공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충청권의 교육인구를 유입하고 공주시가 충청권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초중등 교육기관 집중 개발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에 초·중등 자녀를 둔 임직원들이 교육의 문제로 수도권에 남기 위해 기관을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 공공교육을 위한 기관을 집중 개발하여 이탈률을 감소하도록 함
- 공주시를 충청권 교육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을 위한 공주시로의 유입을 꾀함

2) 명문 교육기관 공주 유치

□ 공주시의 교육 브랜드화

- 개화기 이후로부터 선도적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을 수행했던 공주시의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브랜드화 하여 공주시가 하나의 교육 브랜드로서 충청권 교육의 중심으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충청권 교육의 중심을 넘어 행정수도권 교육의 거점으로서 상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충청권 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교육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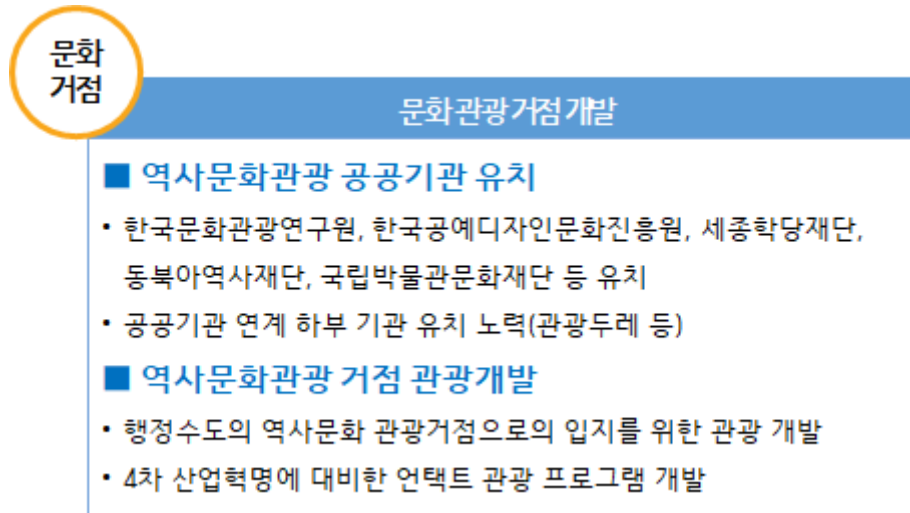
□ 명문 교육기관 유치

- 공주시는 한일고, 충남과학고 등의 명문 고등학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나 교육의 중심으로 교육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 교육 문제로 수도권에 남고자 하는 이주가능 임직원의 퇴직률과 이탈률을 낮추고, 교육을 위하여 공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나 송도와 같이 브랜드화 된 교육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세계 명문 교육기관의 분원을 공주시에 유치함으로써 교육을 위한 인구 유입을 꾀함
 - 제주와 송도와 같이 교육이 브랜드화 된 지역의 경우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족 전체가 교육도시로 이전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공주시도 자녀교육을 위한 인구 유입을 위하여 이를 벤치마킹 하여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제주: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브랭섬홀 아시아, 제이제이케터링 제주KIS, 제주화교소학교, 정주국제학교 등 벤치마킹
 - 송도: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KRIS킹덤로열 크리스천 국제학교, JICS 존스 국제크리스찬 스쿨 등 외국인 학교 벤치마킹

다. 문화거점

□ 문화거점 전략과제 사업

- 문화거점 목표의 문화관광 거점 개발 전략의 세부과제로 역사문화관광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역사문화거점의 관광 개발을 실행함



[그림 V-5] 문화거점 전략과제

1) 역사문화관광 공공기관 유치

□ 역사문화관광 공공기관 유치

-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6개 우선유치 중점유치대상 기관 중 역사, 문화, 관광과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유치하여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공주시의 입지를 다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세종학당재단 등 역사와 문화, 관광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우선유치
- 6개 우선유치 기관 외에 6개 유치가능 기관 중 역사와 관련한 기관을 유치하여 공주시의 역사문화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다짐
 - 동북아역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 공공기관 연계 하부기관 유치 노력

- 공공기관의 유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연계된 하부 기관이나 협회 등의 유치 또는 하부기관의 공주시 신설을 위해 노력함

2) 역사문화거점 관광개발 실행

□ 행정수도 거점 관광개발

- 행정수도의 역사문화관광거점으로서 공주시가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광 개발을 추진함
 - 인근의 부여군과 계룡시 등의 지역도 역사문화와 관련이 깊은 관광주력 도시로서 인근 지역과 경쟁이 아닌 지역연계관광개발 등 협력이 가능한 개발로 지역상생을 준비함
-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서 현재 보유한 문화재와 관광자원 등의 유지보수 및 관광지로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관광지에 대한 보완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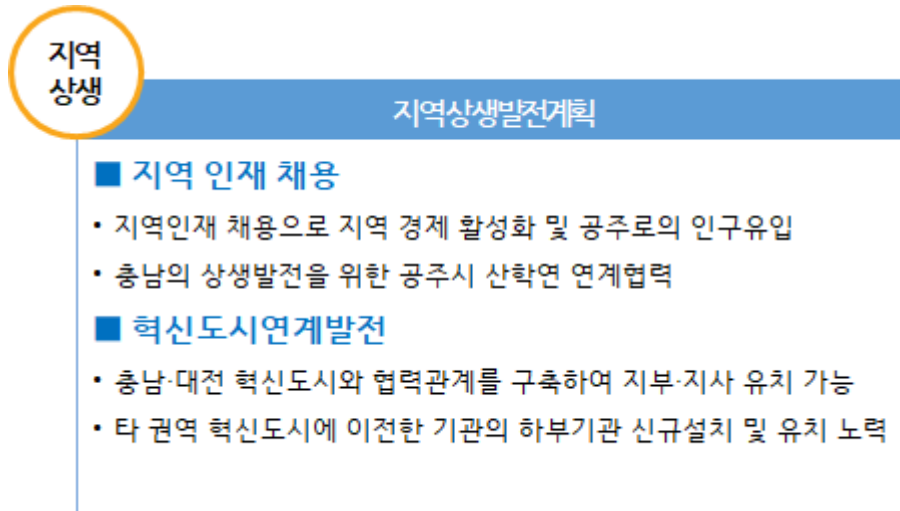
□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광에 대한 수요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1인 관광 수요, 지역 및 생활밀착형 관광, 스마트 관광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개인적인 소비 성향이 강해져 단체여행보다 소규모 관광 위주의 콘텐츠가 필요하며 관광과 관련하여 관광비용 결제의 패턴 또한 변화하여 시대 흐름에 관광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함
- 코로나19로 각 분야에 비대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며 비대면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게 됨
 - 언택트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필요

라. 지역상생

□ 지역상생 전략과제 사업

- 지역상생 목표의 지역상생발전계획 전략의 세부과제로 지역인재 채용과 혁신도시 연계발전 사업을 실행함



[그림 V-6] 지역상생 전략과제

1) 지역인재 채용

□ 공주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 공주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인재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도출
- 지역인재채용 관련 법률과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인재의 범위와 개념 등을 설정함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을 확대 방안을 조사하고, 이전 전후 지역인재채용 비교 방안, 지역인재채용의 쟁점, 지역인재채용 평가방안 등 마련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이 양적·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산학연 연계 협력

- 공주시와 충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주시 및 충남 소재의 대학 등과 산학연 연계 협력을 통해 공주시 지역발전을 제고함

2) 혁신도시 연계발전

□ 혁신도시 협력 관계 구축

- 대전 혁신도시와 충남 혁신도시 등 신규 지정된 인접 혁신도시와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 관련 지부·지사 등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함
-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충북혁신도시와 타 권역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기관 연계기관 유치

- 대전 혁신도시와 충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 세종시로의 인접성 등 지역적 관계성을 기반으로 이전 기관의 연계 기관을 유치함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하부 기관, 협회, 관련 학회 및 연수원 등을 추가 이전 또는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유치 노력

VI. 연계발전방안

1. 지역상생 로드맵
2. 상생발전 거버넌스
3. 공주시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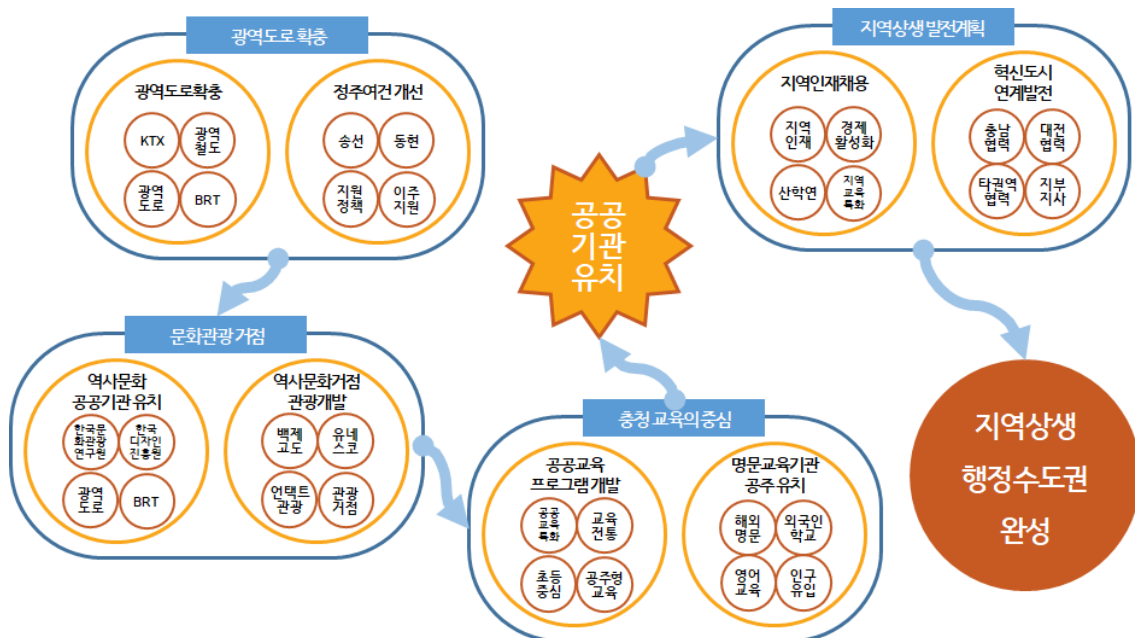
VI. 연계발전방안

1. 지역상생 로드맵

가. 지역상생 로드맵

□ 지역상생 로드맵 구축

- 공주시는 공공기관 유치의 기본 구상의 비전과 목표를 기반으로 지역상생 로드맵을 구축하여 공공기관 유치 및 연계 발전방안을 마련함
- 기본구상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로드맵의 구성으로 각 목표에 따른 전략과 세부사업의 구성 지도를 구축함
- 지역상생 로드맵은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세부 사업의 순서와 위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함



[그림 VI-1] 공주시 지역상생 로드맵

나. 지역상생 로드맵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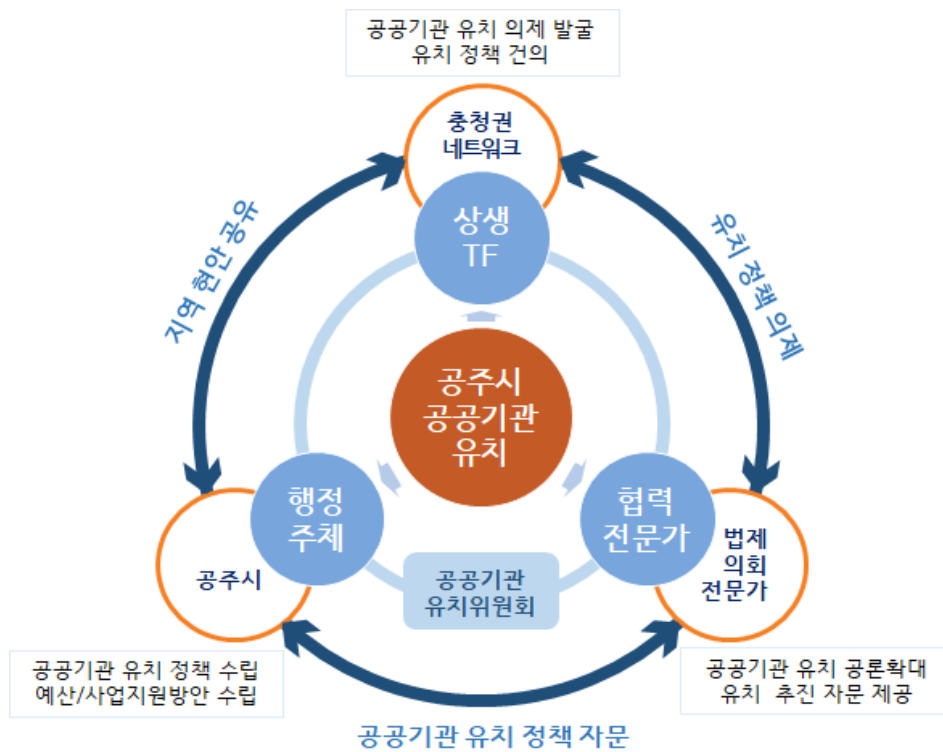
□ 지역상생 로드맵 활용 순서

- 공공기관 유치 기본구상의 비전과 목표, 전략과 세부사업을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 및 목표와 이에 따른 사업 순서를 로드맵으로 구축함
- KTX, 광역철도, 국도 연장, BRT 노선 구축 등 광역도로 확충과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과 이주지원 정책 마련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역사문화관광거점으로서 역사문화관광 공공기관 유치 준비, 역사문화거점 관광개발을 통해서 행정수도의 역사문화관광거점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함
- 충청권 교육의 중심으로 공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중등 중심 교육기관 집중, 공주형 교육 및 명문교육기관 유치 등을 통해 교육 측면에서의 공주시의 경쟁력을 확보함
- 공공기관 유치 기반 마련, 역사문화관광거점 개발, 충청권 교육중심으로 개발을 통해 공주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유치 이후, 지역인재채용, 산학연 협력, 혁신도시 연계 발전 등을 통해 지역상생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함
- 지역상생 로드맵의 구축과 실현을 통해 공주시가 지역상생 행정수도권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가능성을 제고함

2. 상생발전 거버넌스

□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

- 공주시는 공공기관 유치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공주·세종·충남·대전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상생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행함
-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상생발전 거버넌스의 상생TF, 행정주체, 협력전문가 등 개별 주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공주시와 충남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함



[그림 VI-2] 공주시 상생발전 거버넌스

3. 공주시의 역할

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주시의 대응

□ 공주시의 전략 및 실행

- 공주시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따른 공주시의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행정수도권으로서 공주시가 수행해야 할 전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환경분석과 공주시의 기본구상, 실행계획 등을 통해서 공주시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응하여 향후 지원해야 할 역할을 도출함



[그림 VI-3] 공주시의 역할 제안

나. 공주시의 역할 제안

- 행정수도 완성에 대응하여 공주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인접지역의 상생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공주시의 역할에 대해서 제안함

□ 지역발전 기반 준비

- 공주시는 사회인프라 구축 및 정주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공주시와 지역 상생 발전의 기반을 준비함
- 공공기관 유치 이전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의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공공기관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음

□ 공공기관 유치

- 우선선정 공공기관 6개 기관에 대한 유치 준비를 위하여 우선유치 기관에 대한 이전 의향 및 수요, 기관별 요구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한 후속 과제를 진행함으로써 기관별 유치 가능성을 높임
- 우선선정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유치가능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우선선정 공공기관 유치 준비에 준하는 노력을 해야 함
- 여성가족부의 세종시로의 이전을 대비하여 여성가족부 하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세부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여 여성가족부 이전시 하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공공기관 이전 시 공공기관의 입주와 이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공주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주시의 공공기관 조례 등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

□ 지역상생 거버넌스 구축

- 혁신도시와 충남지역, 공주시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상생의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선도로 행정수도권의 협력을 제고함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신뢰분위기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

〈 참고문헌 〉

-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후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조규민, 2021.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인재채용 확대 방안 연구, 김동건, 2020.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거주여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혁재, 2020.
- 혁신도시 정책의 지역고용성과에 관한 연구, 전미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수영, 2018.
-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손동글, 2018.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울산광역시, 2018.
- 지방소멸시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균형 발전의 시작, 이후삼, 2018.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김재환, 정도영, 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2018.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중소도시의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 태안군과 서산시 대상 사전사후 차이 분석, 김선영, 2017.
-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2017.
-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울산혁신도시, 울산광역시, 2017.
- 충북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 김진덕, 김인록, 충북연구원, 2017.
- 혁신도시의 성장거점화 방안, 류승환, 지역발전위원회, 2017.
- 프랑스의 지역정책 사례: 툴루즈의 공공기관 이전과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배준구, 2017.
-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평가,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2016.
-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방안 연구, 이종필, 최도석, 오재환,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2016.
-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전라북도, 2016.
-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임성호,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DGI, 2016.
-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6.
-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성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분야별 대응전략 연구, 정숙영, 서울연구원, 2013.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따른 공주시의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발행일	2021년 9월
발행기관	공주시청
발행처	공주시청 미래전략팀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8741
연구기관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07235)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1길 14(여의도동) 스카우트빌딩 5층 한국응용통계연구원 Tel: (02) 785-6070, Fax: (02) 785-5150